

월간

나라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9

2021
Vol. 57



Humanity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CONTENTS

September. 2021

VOL. 57

월간 나라재정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273-05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fis.or.kr

발행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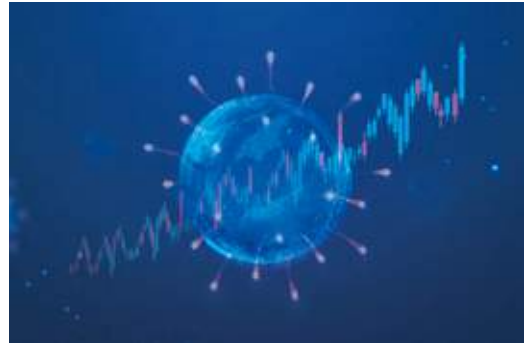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분석본부 | 02-6908-8568

제작

(주)케이에스센세이션 | 02-761-0031



04

재정 INSIGHT

04

KPFIS 인사이트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재정확충 동향
심혜인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

14

재정칼럼

· PAYGO와 연금개혁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반전도 논의해보자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좋은예산센터 소장

22

「2022년 예산안」과 국가재정 운용방향

정성호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위원



28

재정 NOW

- 28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 34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예산
- 40 키워드 재정
 거점국립대학
- 44 해외재정동향
 미국과 EU의 2022년 예산 및 자원배분 특징
- 50 Data for All
 데이터 생태계의 나침반, 통합 데이터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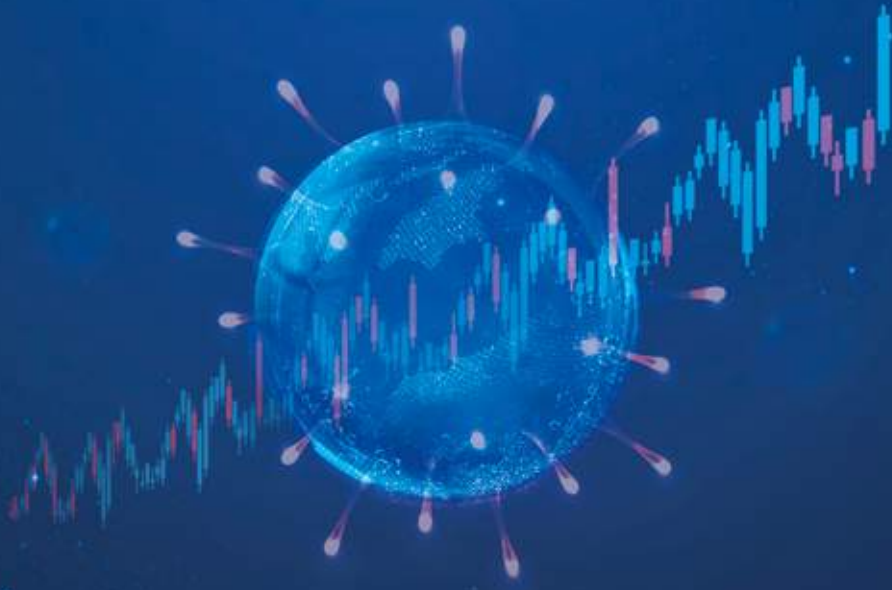
52

재정 STORY

- 52 이달의 재정 이야기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위원회
- 56 정부재정통계변천사
 1980년대 경제안정화: 물가안정과 긴축재정
- 62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화가들은 왜 자화상을 많이 그릴까?
- 66 경제철학 이야기
 종교경제학을 창시한 막스 베버
- 70 재정 캘린더
- 72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 75 애독자 코너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재정확충 동향

심해인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hyein@kpfis.or.kr)



세계경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위기 전 성장경로를 서서히 회복하는 조짐이다. 이에 맞춰 재정담론도 점차 '긋간 채우기'로 옮겨가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재정으로 맞서면서 '돈을 풀던 시간'이 었다면, 이제 각국의 재정당국은 '돈 채울 궁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하는 시간'인 셈이다. 물론 어느 나라도 △재정개혁 △재정건전성 △증세 등은 오로지 재정당국의 몫이다. '정책 우군(友軍)'을 기대하기 어려운 과제다. 아니 오히려 재정 걱정이라도 내비치면 "재정의 시대적 소명을 모른다"거나,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소리"라고 책잡히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향후 몇 년은 어느 나라에서든 "재정건전성이 가장 큰 도전이고 경제 운용의 최전선"이 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이번 호에서는 각국의 글로벌 재정확충 동향과, 한국 정부가 이달 초 내놓은 재정혁신 추진방향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최근 유럽연합(이후 EU), 미국 등 주요국들은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추가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EU는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Recovery Fund)의 신규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플라스틱세, 탄소국경세, 디지털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¹.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탄소국경세 도입 움직임을 보이는가 하면 글로벌 법인세 개편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유럽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가당음료세 등 비만과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추가 세수를 동시에 챙기는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증세까지는 아니지만 수입기반 확충, 지출효율화,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에 적극 나섰다.

디지털세와 글로벌 법인세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 기업의 형태는 온라인 광고, 앱스토어, 클라우드, 전자상거래 등으로 다양하며 주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사업 활동을 수행한다. 문제는 이러한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성장과 함께 국제적인 세원의 이동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구글의 2020년 한국 매출은 5조원으로 추산되는 반면에 신고 매출액은 2,200억원, 법인세 신고액은 97억원에 불과했다². 소위 구글세로 통하는 디지털세(digital tax)는 다국적 디지털 기업이 법인세와 별도로 매출이 생긴 나라에 세금을 내는 새로운 과세 방식이다. OECD는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전 세계 정부가 매년 1,000억달러(약 111조원)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³.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세에 대해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져 실제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⁴. 이에 따라 최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영국 등 유럽을 중심으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고정사업장 소재지와

¹ EU의 2021~2027년 다년간지출예산(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에 따르면, 1단계(2021년 플라스틱세 도입), 2단계(2021년 상반기 탄소국경조정세 및 디지털세 법안 제출, 2023년 시행), 3단계(항공 및 해상운송을 배출권 거래대상에 포함), 4단계(금융거래세 도입)의 과정을 통해 EU가 직접 징수하는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기로 했다.

² 디지털 기업이 전통적인 기업에 비해 세부담이 낮은 주된 이유는 디지털 경제가 사업장 없이 수익실현이 가능하다는 특징 때문이다. 현행 국제조세 원칙상 법인세는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곳에 부과하는데, 디지털 기업은 소비자국에 고정사업장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장소재지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가 어렵다. 이 밖에 디지털 기업은 무형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는데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한 후 시장소재지에서 로열티 등의 무형자산 사용비용을 지급하여 시장소재지의 세원을 잠식하는 문제, 과세당국 입장에서 디지털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등이 있다.

³ OECD 재정위원회(Committee on Fiscal Affairs)는 2012년부터 G20와 함께 이러한 디지털 경제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방지 대책(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프로젝트에 착수했고, 2016년 6월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가 출범했다. 2019년 6월 G20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새로운 과세권 배분원칙 및 잠식방지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2020년 말까지 디지털 과세에 대한 국제합의안을 작성할 것을 합의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1년 말까지로 연기됐다.

⁴ 그간 디지털세 도입을 놓고 EU와 미국은 심한 대립을 해왔다. 디지털 기업 본사가 많은 미국은 디지털세 논의에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해 왔다.

무관하게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들이 직접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해당 국가가 이들의 매출액에 대해 일정 세율로 조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따른다⁵.

〈표 1〉 국가별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현황

국가	시행시기	부과대상 기준		세율	과세대상
		전 세계 매출액 (이상)	자국 매출액 (이상)		
프랑스	2019.1.부터 소급적용	7.5억유로	2,500만유로	3%	디지털 인터페이스 제공, 광고 서비스
헝가리	2019.7.~ 2022.12.(한시적)	3억유로	-	7.5%	광고
이탈리아	2020.1.	7.5억유로	550만유로	3%	광고, 데이터 서비스 판매
말레이시아	2020.1.	50만링깃	-	6%	디지털 인터페이스 사용
터키	2020.3.	7.5억유로	400만유로	7.5%	광고, 콘텐츠, 소셜미디어
인도	2020.4.	2,000만루피	-	6% (2%)	광고, 전자상거래 운영자
영국	2020.1.부터 소급적용	5억파운드	2,500만파운드	2%	SNS, 검색엔진, 온라인 중개 서비스
폴란드	2020.7.	7.5억유로	-	1.5%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광고
뉴질랜드	2020.10.	7.5억유로	350만 뉴질랜드달러	3%	온라인 중개 서비스, 소셜미디어, 콘텐츠, 검색 엔진
스페인	2021.1.	7.5억유로	300만유로	3%	광고, 데이터 판매
오스트리아	2021.1.	7.5억유로	2,500만유로	5%	광고
브라질	2021.5.	7.6억달러	2,500달러	1~5%	광고, 데이터 서비스 판매
벨기에	도입예정	7.5억유로	2,500만유로	3%	데이터 판매
체코	도입예정	7.5억유로	1억코루나	5%	광고, 디지털 인터페이스 사용, 데이터 판매

자료: KPMG. (2021), 「Taxation of the digitalized economy: Developments summary」; 홍지연(2021.6.) 재인용

한편, 그간 미국은 디지털세에 반대해 왔으나⁶,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수정 제안을 내놓으며 디지털세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⁷. 2021년 7월 1일 OECD/G20 IF 총회에서 Pillar1(매출발생국에 대한 과세권 배분)과 Pillar2(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의 핵심내용에 대

⁵ 2018년 EU 집행위원회는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가 도출되기 전 임시 방안으로 디지털 서비스세의 도입을 EU 회원국에 권고했다(EC, 2018).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세는 주로 디지털세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인 규범이 도출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조세로 여겨진다. OECD의 BEPS 프로젝트와 완전히 동떨어진 것은 아니며, 개별 국가들로 하여금 BEPS 이행을 촉진하고 동시에 자국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⁶ 미국은 개별 국가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USTR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관행으로 판단하고 보복관세 부과 대응해왔다. 2019년 12월 프랑스 주요 수출품에 대한 25% 추가 관세(13억달러 수준), 2021년 6월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인도, 터키 6개국 등에 25%의 관세를 책정함으로써 미국과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국가들 간 실제 과세 및 관세 부과 실행은 상호 간 유예하기로 한 상태이다.

⁷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에 집중되는 화살을 피하기 위해 과세 대상 기업을 일정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넘는 글로벌 기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하던 과거의 논의에서 벗어나 대상 업종이나 사업을 구분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상 기업의 범위가 넓어졌다. 글로벌 최저한세율은 15% 이상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기존의 디지털세 논의는 글로벌 법인세 논의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탄소세와 탄소국경세

최근 세계 주요국들은 기후변화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서는 한편, 동시에 기금신설 및 탄소가격 강화 등 세제 개편을 통한 자원 마련에 힘쓰고 있다.

탄소세(carbon tax)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여 자연스럽게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제도로, 1990년에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되어 현재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의 탄소세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으로, 이들 국가는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EU-ETS)를 함께 시행하되 이중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세 감세, 산업용 부문에 대한 탄소세 감면 등 급격한 조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각각 2012년과 2019년에 탄소세를 도입했다.

한편, 프랑스와 호주는 탄소세 도입 후 조세저항이 발생한 사례에 해당된다. 프랑스는 2014



년 탄소세 도입 후 2017년 탄소세율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2018년 이에 대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며 인상이 유예된 상태이다. 호주는 2012년에 탄소세를 도입했으나 시행 2년 만에 폐지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에너지 관련 세제는 운영 중이나 탄소배출량에 대해 과세하는 탄소세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표 2〉 탄소세 시행 국가 및 탄소세율 현황

(단위: US\$/tCO₂e)

국가	탄소세율	국가	탄소세율
스웨덴	137.24	슬로베니아	20.32
스위스	101.47	스페인	17.62
룩셈부르크	40.12(디젤), 23.49(화석연료)	라트비아	14.10
리히텐슈타인	101.47	남아프리카공화국	9.15
핀란드	72.83(수송용), 62.25(그외)	아르헨티나	5.54(대부분의 액체연료)
노르웨이	3.87(하한), 69.33(상한)	칠레	5.00
프랑스	52.39	콜롬비아	5.00
아이슬란드	34.83(화석연료), 19.79(F-gases)	싱가포르	3.71
아일랜드	39.35(수송용)	일본	2.61
캐나다	31.83(연방정부)	에스토니아	2.35
덴마크	28.14(화석연료), 23.65(F-gases)	멕시코	0.36(하한), 3.18(상한)
포르투갈	28.19	우크라이나	0.36
영국	24.80	폴란드	0.08
네덜란드	35.24		

자료: World Bank, Carbon Pricing Dashboard, data last updated 2021.4.1.(검색일: 2021.9.3.)

최근 EU와 미국 등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탄소국경세) 도입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탄소국경세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적은 국가로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되는 무역 관세로, 자국 외 국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탄소국경세 도입을 결정했다. 대상이 되는 품목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의 5가지로, EU 밖에서 생산한 품목에 대해서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사도록 했다. EU는 이처럼 유럽으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유럽 역내에서 생산한 것보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한 제품에 대해 추가로 과세함으로써 연 100억유로(약 13.5조원)에 이르는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는 2023년부터 본격적인 과세를 시작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과세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U 외에도 미국, 캐나다 등이 유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행정

부가 탄소국경세 시행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이후 미 민주당 소속 크리스 쿤스(델라웨어) 상원의원과 스콘 피터스(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탄소국경세 도입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최대 160억달러(약 18조원)에 이르는 추가 세수가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탄소국경세는 자국보다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로부터 수입한 제품에 대해 관세를 물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정책이 시행되는 지역을 넘어서 무역에 파급효과를 지닌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탄소세보다 더 신중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플라스틱세

EU 플라스틱세(EU plastic tax)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 kg당 0.8유로(80ct)의 세금을 부과하는 EU 차원의 플라스틱 규제이다. EU는 2020년 7월 유럽 경제회복기금 확보를 목적으로 플라스틱세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2021년 1월부터 각 회원국에게 재활용 불가 포장재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플라스틱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로써 각 회원국 정부는 자국의 연간 포장재 플라스틱 생산량에서 재활용 플라스틱을 제한 후, 남은 폐기물에 kg당 0.8유로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특징적인 것은 EU 플라스틱세는 기업이 아니라 국가에 부과된다는 점이다. 즉, EU 회원국은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을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EU에 내야 한다. 그리고 플라스틱세의 부과 시기, 대상 및 부과 방법 등 세부 규정은 각 회원국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로 인해 각 국가에서는 플라스틱 포장을 사용한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자원 마련을 위해 별도의 세금도 신설하고 있다. 예컨대 핀란드는 비재생 천연자원으로 만든 포장에 부과하는 세금을 도입했고, 이탈리아, 스페인 등도 각각 상황에 맞



는 세금을 도입하고 있다⁸. EU 집행위는 플라스틱세 도입으로 연 66억유로(프랑스 13.7억유로, 독일 13.3억유로, 이탈리아 8.1억유로 등)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⁹.

〈그림 1〉 플라스틱세 시행 시 주요국별 예상 분담금



자료: 폴리틱오(2020년 2월 발표, 당시 EU 차기 예산안은 미정)

한편, EU에서 탈퇴한 영국도 플라스틱 포장재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2022년 4월부터 영국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 중 최소 30% 재활용된 플라스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플라스틱 포장재에 톤당 200파운드(약 3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인도네시아는 음료를 담는데 쓰이는 소형 플라스틱 용기와 식용유 등을 담는 플라스틱 포장

에 개당 최소 한화 18원의 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지난 2016년 2월부터 22개 주요 도시에서 판매되는 비닐봉지에 개당 200루피아(약 17.54원)의 소비세를 부과한 적이 있는데, 이후 수개월 만에 비닐봉지 사용량이 25% 감소했다.

설탕세 등 비만과세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의 소비 감소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세금을 도입하고 있다. 비만과세는 직접적인 비만요인으로 작용하는 설탕을 일일 권장 섭취량 이상으로 섭취하게 유도하는 가당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가당음료세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른바 설탕세(sugar tax)다. 그 밖에도 탄산음료세, 과자세, 정크푸드세 등 형태가 다양하다. 가당음료세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월 국회에서 가당음료에 세금(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법안이 발의돼 화제가 됐다⁸.

World Bank(2020)에 따르면 영국, 스페인, 미국 등 주요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45개 국가에서 설탕세가 운영되고 있다. 과거 식품에 비만과세를 부과하는 국가로는 태평양섬이나 카리브해섬 등과 같이 비만율이 높은 조그만 섬나라들이 대부분이었으나, 2016년 WHO가 가당음료에 대한 과세 부과를 권고한 이후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도 설탕세를 도입하는 등 OECD 국가들의 식품에 대한 비만과세 부과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World Bank(2020)에 따르면 설탕세를 부과하는 국가들 중 2/3 이상의 국가들이 종량세 형태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종량세 부과 국가의 대부분에서 부피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점차 구간별 부피 기준 혹은 설탕 함량에 따라 종량세를 부과하는 국가도 증가하고 있다¹¹.

한편, 헝가리의 건강식품세(public health product tax)는 가당음료 외에도 비스킷, 잼, 초콜릿 및 사탕, 빵 등 설탕을 많이 함유하는 식품과 소금을 함유하는 식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물리고 있다. 반면 해당 제품에만 과세하는 것은 산업 간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등의 제조업체의 강한 반발과 로비로 이미 도입된 설탕세를 완화한 국가들도 있다¹².

8. 이탈리아 정부는 2020년부터 기업이 배출하는 플라스틱 1kg당 약 1유로(한화 1,300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부과 대상은 병, 폴리에틸렌 봉지 및 세제 용기, 완충제, 가전제품 포장 및 제품 라벨 등으로, 과세 대상자는 플라스틱을 생산, 제조, 판매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포함된다. 반대로 생분해성 물질을 생산하는 회사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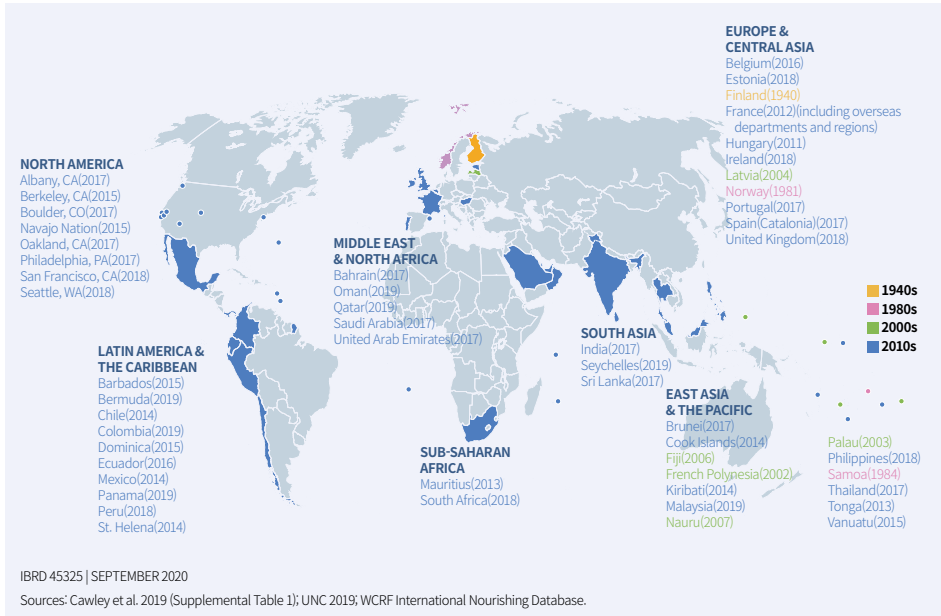
9. 정치일간지 폴리티코(Politico)는 2020년 2월 EU 통계청 데이터를 이용해 각국의 예상 부담금을 분석했다.

10.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 수입, 유통, 판매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음료 100L당 함유량이 20kg을 초과하면 2.8만원, 16~20kg면 2만원 등으로 당 함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한다. 예컨대, 코카콜라 250ml 제품에는 27g의 당이 함유되어 있다. 즉, 100L(400캔)에 10.8kg이 함유되어 있어 총 1만 1,000원의 세금이 더 붙게 된다. 환산하면 캔당 27원이다.

11. 종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27%(13개 국가), 종량세 중 설탕 함량을 중심으로 부과하는 국가는 10%(5개 국가), 부피 기준으로 부과하는 국가는 46%(22개 국가)이다. 또한 구간별 부피 기준(tired volume based)으로 부과하는 국가는 17%(8개국)이다.

12. 덴마크는 설탕세 역사상 가장 오래된 나라였으나, 포화지방 함량에 따라 부과하는 형태까지 범위 확대를 시도했다가 도입 1년 만인 2013년에 전면 폐지됐다. 미국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에서도 설탕세 도입 4개월 만에 제조업체의 로비와 더불어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이유로 취소됐다.

〈그림 2〉 설당세 부과 국가 현황



주: 괄호 안은 최초 도입 연도

자료: World Bank. (2020), 「Taxes on sugar-sweetened beverages: International evidence and experience」

한국의 재정혁신 방향

정부도 이달 초 국회에 낸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디지털·저탄소사회로의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맞춰 과세구조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우리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나 정상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재정지출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데다 △양극화 대응 △미래형 경제로의 전환 △인구총격 대응 △감염병·자연재난·안보 등 국민 안전 등에 지출소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정부는 2021~2025년 기간 동안 재정수입은 연평균 4.7% 증가하는 반면, 재정지출은 연평균 5.5%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2차 추경 기준으로 47.3% 수준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에 50%를 넘어서고, 22년에는 58.8까지 높아지게 된다¹³. 국가부채 수준이 아직은 견딜만하다고 하지만, 늘어나는 지출소요를 감안하면 ‘비탈길을 내려가는 눈덩이’처럼 금세 커지고 가속도까지 붙을 수 있는 여건인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역외세원 관리 강화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 방지 △비과세 및 감면제도 정비 △세외수입 확대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출구조

¹³ 2021년 47.3% → 2022년 50.2% → 2023년 53.1% → 2024년 56.1% → 2025년 58.8%(국가재정운용계획)

조정 방안으로는 △저출산·고령화·지역소멸·4차 산업혁명에 맞춘 투자우선순위 조정 △저성과 및 집행부진사업 구조조정 △유사중복사업 정비 △국유지 민간 참여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관리체계도 바꾼다. 2023년 예산부터 ‘온실가스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해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등을 지원한다. 지방소멸 대응기금도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¹⁴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 △국가채무 보완지표(순채무) 도입 검토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참고 문헌

- 기획재정부. (2021.8.),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김빛마로·이경근. (2019),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조세쟁점과 과세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19-0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김은경. (2019.9.), 디지털세(Digital Tax)의 현황 및 쟁점. 이슈&진단, No.387. 경기연구원.
- 노현정. (2020.12.), OECD 디지털세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71호. 국회입법조사처.
- 백수연. (2021.5.), 탄소세 논의 동향. NABO 추계&세제 이슈. 국회예산정책처.
- 송민경. (2020.2.), 설탕세(Sugar Tax) 과세 동향과 시사점.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28호. 국회입법조사처.
- 유호람·윤성만. (2019), 건강세제 관련 해외연구 동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세무학연구, 제36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 예상준·오택현. (2021.7.), 최근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vol.21, No. 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정선·권지연. (2021.4.), EU 탄소국경조정세 논의동향과 추진전망. Global Market Report, 21-101. KOTRA.
- 장영욱·오택현. (2021.7.), EU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세계경제 포커스, vol.4 No. 4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규산. (2020.8.), 코로나19 위기를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기회로. 나라경제, 2020년 8월호. KDI 한국개발연구원.
- 최성은. (2021.7.), 비탄세 해의 동향과 비탄세 도입에 관한 소고, 재정포럼, 제301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홍지연. (2021.6.),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현황 및 논의 방향. 자본시장포커스, 2021-12호. 자본시장연구원.
- European Commission. (2020),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2021-2027.
- KPMG. (2021), Taxation of the digitalized economy: Developments summary.
- World Bank. (2020), Taxes on sugar-sweetened beverages: International evidence and experience.

¹⁴ 재정준칙 도입방안 발표(2020.10.) →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 제출(2020.12.)



PAYGO와 연금개혁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yongha01@sch.ac.kr)



PAYGO는 재정 원칙으로 자주 인용되는 Pay As You Go의 줄임말이다.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정책 관련 법안 마련 시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화되도록 하는 원칙이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준칙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규정이다. PAYGO는 미국 등 몇몇 국가에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로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을 때 마련된 처방이지만, 평상시에도 국가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당연히 고려해야 할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일반재정에서는 쉽지 않은 과제인 PAYGO 원칙은 공적연금 재정방식을 분류할 때도 활용된다. 연금재정방식을 크게 부과방식(Pay As You Go Scheme)과 적립방식(Funded Scheme)으로 나눌 때 PAYGO의 개념이 사용된다. 부과방식이란 매년 연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당해 연도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적립방식은 가입자 단위로 가입기간 동안 불입한 연금보험료 원리금 합계만큼을 은퇴 기간 동안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자는 원칙적으로 적립금이 생기지 않고 필요에 따라 지불준비금 정도가 있을 뿐이지만, 후자는 연금보험료 불입하는 기간에서 연금 지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적립금(Fund)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부과방식은 회계연도별로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을 일치시키지만 적립방식은 가입기간과 수급기간을 통틀어서 개별수입과 개별지출을 일치시키고 이를 전체 가입자와 수급자를 통합하여 각 연도별 총수입과 총지출을 산출한다. 초기에는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많아 적립기금이 증가하지만 성숙시점에 이르면 총수입과 총지출이 균형을 이루게 되고 적립기금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부과방식이나 적립방식이나 성숙기에 들어가면 적립기금 존재 여부만 차이가 나는 것이지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는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부과방식하에서는 적립기금 없이 단연도 기준으로 재정지출만큼 재정수입이 들어오게 되어 일반예산에서 재정하는 방법과 결과적으로 다르지 않아서 부과방식을 예산방식으로 부르기도 한다. 지출되는 만큼을 수입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PAYGO라고 칭한다.

연금재정방식으로 부과방식으로 운영할 때 세대별로 부담액과 수급액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 가입자 수와 수급자 수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공적연금에서 가입자 수와 수급자 수는 인구구조상 생산가능인구와 노년인구에 비례하게 되는데, 인구가 증가하거나 인구가 감소하면 세대별로 부담액과 수급액이 달라지게 된다.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의 세대는 부담액보다 수급액이 많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의 세대는 부담액이 수급액보다 적게 된다. 즉,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부과방식 연금제도의 전제가 되는 PAYGO 원칙이 무너진다. 총합으로서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이 일치되지만, 세대별로 부담액과 수급액을 일치시킨다는 의미에서의 Pay As You Go 개념이 성립하지 못하게 된다.

Pay As You Go 방식으로 운영되던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의 공적연금 제도에서 연금개혁이 시작된 것은 외형상으로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PAYGO 원칙을 복원하기 위함이었다. 현세대의 입장에서는 수급액을 낮추고 부담액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세대 입장에서 부담액이 수급액

보다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연금개혁의 본질은 세대 간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부담한 것만큼 수급하도록 균형화시키는 것이고 이는 PAYGO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명목적확정기여형연금제도(Notional Defined Contribution)는 부담한 것의 원리금 합계만큼을 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연금개혁한 사례이고, 그 외의 국가들에 있어서도 수급액과 부담액을 균형화시키는 개혁이 이루어졌다.

적립방식은 제도 원리적으로 부담액의 원리금 합계와 연금 수급액이 균등하도록 설계된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단위회계연도가 아닌 가입기간 및 수급기간 전체 기간에 걸쳐서 PAYGO 원칙을 구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적립방식은 인구구조의 변동에도 원칙적으로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다. 따라서 인류 사회가 직면한 장수화 시대에서 PAYGO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적립방식으로 연금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미 연금제도를 부과방식으로 시작한 국가에서는 이중 부담의 문제 등으로 적립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인구구조 변화에 취약한 부과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시대인 1986년에 입법되었기 때문에 적립방식 성격을 연금재정방식에 가미했다. 그러나 완전적립방식이 아닌 수정적립방식, 즉 수급액이 부담액보다 많은 구조로 재정을 설계했고, 그 결과 제도 성숙기에 이르면 적립기금이 일정 수준으로 증가된 이후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고갈되게 된다. 게다가 평균수명의 연장 속도가 제도설계 시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졌고, 전혀 예상치 못한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서 1998년, 2007년에 두 차례의 국민연금



개혁을 했지만 적립기금은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수명의 연장은 예상 수급액을 크게 높여 현세대의 입장에서 부담액보다 훨씬 많은 초과이익을 가지게 된 반면에, 적립기금이 고갈되어 적립방식이 부과방식으로 자동으로 전환되면, 부과방식이 가지고 있는 인구감소기의 미래세대의 불이익 현상이 극단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즉, 적립기금 고갈 이후 세대는 부과방식하에서의 보험료 부담액이 국민연금법상의 법정 연금수급액보다 훨씬 많아져 연금 가입으로 오히려 큰 손해를 입게 된다.

부과방식이 가진 취약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안된 수정적립방식 혹은 부분적립방식은 적립기금이 고갈되어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는 순간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미래 세대의 반발로 지속가능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해야 할 우리나라의 연금개혁의 요체는 적립방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내연적으로 존재하는 PAYGO 원칙을 복원하는 것이다. 즉, 수급액이 부담액보다 2배 내외 높게 되어 있는 현 연금제도의 구조를 수급하는 금액만큼을 부담하도록 전환하는 것이다. 이미 연금수급을 시작한 세대에게는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가능한 조기에 연금개혁을 이루어 다수의 인구층이 밀집해 있고 국민연금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베이비 붐 세대가 더 부담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해서 적립기금의 고갈시점을 가능한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의 개편의 방향은 적립기금이 이미 고갈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적립금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적립방식의 유지는 어렵지만, 신규 가입자부터는 수급액과 부담액을 일치시키는 PAYGO 원칙을 적용해야 하고, 기존의 가입자도 향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1,000조원 내외에 이르는 과중한 연금충당부채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이미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계층도 일정 정도의 희생을 함께 분담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는 장수화와 저출산으로 인구구조 불균형이 극심하지만 언젠가는 인구구조도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급부담구조의 균형화 즉 연금제도에서의 PAYGO 원칙의 실현을 통하여 미래세대도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세대의 당연한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반전도 논의해보자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좋은예산센터 소장(tikim@korea.ac.kr)



현대국가 재정 운용의 두 가지 목표 중 하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국민에게 공공재화와 서비스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주요 목표가 된 까닭은 자명하다. 현대국가의 정부지출 규모는 이전 시기와는 비할 바 없이 커졌고 그 결과 많은 국가에서 국가채무가 엄청나게 쌓였다. 그런데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서 정부지출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재정을 여하히 안정적으로 운용하는가가 대부분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재정 운용 과제가 된 것이다.

여기까지 읽은 독자라면 이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대충 이런 내용일 것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매우 중요한 재정 운용 과제인 것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는 다른 비교 대상 국가에 비해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아직은 국가채무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물론 한국의 국가채무 규모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작다. 하지만 현재의 규모만 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한국은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빠르다. 2019년 국가채무 규모는 37.1%였는데 2021년에는 48.7%로 2년 만에 10%p가 넘게 늘었다. 물론 그 사이에 코로나19 위기대응 지출이 있었지만 이를 제외해도 우리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매우 빠르다.

우리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이다. 그래서 향후 정부지출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국민연금만 해도 그렇다. 지금은 급여를 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많아서 적립금이 계속 쌓이고 있다. 하지만 2050년 중반 경이면 적립금은 모두 소진되며, 그 이후 계속 급여를 지급하려면 보험료율을 2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감당하기 어렵다. 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도 걱정이다. 노인층의 의료지출비는 근로 연령대의 4배가 넘는다. 빠른 고령화와 함께 의료지출 규모도 연금지출 규모만큼 급증할 것이다. 건강보험 제도를 계속 유지하려면 현재 8.65%(요양보험료 포함)인 보험료가 얼마나 더 높아져야겠는가? 그뿐만이 아니다. 정부 재정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용한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대부분 근로 연령층이 일해서 번 수입에서 걷는다. 그런데 갈수록 근로 연령층은 줄고 노인층은 증가한다. 돈을 낼 사람은 줄고 (복지지출 등으로) 돈을 써야 하는 대상은 늘어나니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포퓰리즘적인 지출은 막아야 한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없애야 한다. 꼭 필요한 곳에 한해서, 최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지출이 이뤄져야 한다. 오늘 우리가 무심코(혹은 무턱대고) 지출한 돈이 내일 우리 자식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후손에게 빚더미를 남기는 무책임한 윗세대가 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느라 비분강개하면서 끝을 맺었다. 어쨌든 이런 식의 내용은 재정지출과 국가채무 관련한 글에서 노상 하는 말이라 이제는 식상하기까지 하다. 나 역시 이런 내용의 글을 여러 번 기고했다(비록 식상해도 맞는 말은 따르는 것이 정도이겠다).

그런데 이번 기고문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상당히 다른 시각의 얘기를 해보려 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미리미리 저축해서 나중을 대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다. 이제부터 반전의 묘미를 느껴보자.

최초의 경제학 교과서로 알려진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의 원제목은 ‘국부의 본질과 원인에 관한 연구(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이다. 원제목이 긴 탓에 이를 축약한 국부론으로 알려졌지만, 원제목은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잘 보여준다. 제목대로 책에서는 한 나라가 부유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부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물론 부유한 나라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철학적인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순전히 물질적인 관점에서 묻는 것이다. 그럼에도 올바른 답이 쉽지 않다. 스미스가 이를 논의한 까닭은 당시 팽배한 중상주의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함이었다. 중상주의는 말 그대로 상업, 특히 무역을 중시한다. 수입은 억제하고 수출은 장려하는 흑자 무역을 통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귀금속을 잔뜩 사서 쌓아두면 그것이 곧 국가의 부라고 여긴다. 그런데 나라 곳곳에 쌀도 아닌 귀금속을 잔뜩 쌓여둔다고 잘 사는 나라일까? 중상주의의 절정기 때, 동아시아와 신대륙에서 채굴한 귀금속이 대량으로 유럽에 들어왔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금은(화폐)은 풍부해졌는데, 다른 재화와 서비스의 양은 그대로니 물가만 잔뜩 올랐다.

스미스는 국가의 부는 국고에 쌓아 둔 귀금속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국민의 생산력에 달려 있다고 했다. 쉽게 말해 재화와 서비스를 많이 생산하는(할 수 있는) 나라가 부유한 나라라는 것이다. GDP 높은 나라가 잘 사는 나라라는 지극히 지당한 말이다.

30년 뒤의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지금 허리띠를 잔뜩 졸라매고 버는 돈을 쓰지 않고 국고에 쌓아둔다면 어떻게 될까? 30년 뒤인 2051년의 대한민국 국민의 소비는 결국 당시 대한민국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로 이뤄진다. 미래의 (일하는 자와 피부양인을 합한)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여유롭게 살 수 있는가는 당시 대한민국이 얼마의 GDP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에 달려있는 것이지, 국고에 얼마의 화폐(+채권)를 쌓아두고 있는 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는 기업에 비유해 보자. 한 중견기업이 있다. 이 기업은 현재 규모에서 제법 짭짤한 수익을 낸다. 그런데 현재에 만족하고 매년의 수익을 투자하는 대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10년이 지나도 계속 동일한 규모에 머문다. 하지만 매년의 수익을 투자해서 시설을 확충한다면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게다가 빚을 내서 시설을 더 크게 확충하면 더욱더 많은 생산과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다소 한쪽으로 치우쳐있다. 중견기업이 빚내서 시설 확충하여 더 많이 만들었는데 시장 상황이 변해서 안 팔리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은행 대출을 받은 사장이 그 돈을 성실하게 투자하는 대신 개인의 사치에 유용할 수도 있다.

비록 곡해의 소지는 있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다. ‘미래의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데, 향후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높은 생산력을 갖추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물론 내 말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말고, 빚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다. 과거 개발



연대 시절의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맸다. 그렇게 모은 돈을 공장 짓고 고속도로 내는데, 생산력을 높이는 데 투자했다. 개발연대의 성공에 취해서 빚 무서운 줄 모르고 외국에서 돈 끌어오다 IMF 외환위기를 맞기도 했다.

알뜰살뜰한 운용은 정부 재정의 으뜸 덕목이다. 다만 무조건 재정건전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라는 점은 밝혀야겠다. 미래 대한민국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R&D 투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그리고 사람에 대한 투자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는 재정건전성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해야겠다. 사족을 붙이자면, 이런 투자가 제대로 이뤄져서 생산력 증대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좋은 정치와 행정이 필수라는 것도 확실히 해야겠다.



「2022년 예산안」과 국가재정 운용방향

정성호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위원(jazzsh@kpfis.or.kr)



정부는 이달 초 국회에 「2022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냈다. 현재의 경제여건에 대한 정부의 인식, 재정사업 간 우선순위, 향후 5년간 중기적 시계에서 바라본 나라 살림살이 등을 엿볼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정부안을 토대로 △내년 경제여건 △예산 편성 방향 △2021~2025년 재정총량 △분야별 재원배분 △중점 투자사업 등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나라재정의 현재 좌표, 나아갈 방향, 해야 할 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경제주체 간 일치된 상황인식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위기극복의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편집자 주-

1. 경제여건 및 2022년 예산편성 방향

2020년 코로나19 경제위기가 시작된 이래 우리 정부는 재정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확장함으로써, 재정이 경제위기의 한복판에서 강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총 6차례 추경¹을 편성하는 등 맞춤형 피해지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성장을 견인하고, 분배를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주요국 대비 GDP 역성장 폭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올해 2/4분기까지의 경제회복 속도도 경제규모 10위권 내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2021년의 경우 글로벌 경제는 지난해의 침체로부터 벗어나 회복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회복 속도는 백신 보급 및 정책 대응 여력에 따라 매우 불균등하게 진행 중이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나 인플레이션 압력 등이 경기회복을 제약할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한다. 국내 상황 역시 글로벌 경제와 반도체 업황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며 경제회복을 견인 중이다. 다만 코로나19 4차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대면 서비스업 위주로 내수회복의 발목을 잡고,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형국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의 3대 키워드를 회복, 상생, 도약으로 잡았다. 내년 예산은 △위기 이전의 일상과 삶을 되찾는 회복 예산 △회복의 온기를 경제 전반에 나누는 상생 예산 △경제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미래로 나아가는 도약예산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한 중점투자 방향으로 △경제회복 및 글로벌 강국으로의 도약 △양극화 대응 △미래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국민보호 강화 및 삶의 질 제고 등으로 정했다.

2. 2021~2025년 재정총량

정부는 「2022년 예산안」에서 총수입을, 2021년 대비 34.2조원(2차 추경 기준) 증가한 548.8조원으로 전망했다. 반면에 총지출은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2021년 대비 0.5조원(2차 추경기준) 감소한 604.4조원으로 잡았다. 이런 총수입과 총지출을 증기시계로 볼 경우 2025년에 각각 618.5조원과 691.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렇게 재정을 운용할 경우 2022년 통합재정수지는 55.6조원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 -75.4조원이나 2차 추경 대비 통합재정수지 -90.3조원에 비해 적자폭이 대폭 줄어든 수치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2021년 6.2%(2

¹ 2020년 4차례, 2021년 2차례 편성



차 추경 기준)에서 내년엔 4.4%로 줄어든다. 액수로는 94.7조원 적자다.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소폭 증가해 109.2조원까지 늘어나지만 GDP 대비 비중은 4% 후반대에서 관리된다.

국가채무는 빠르게 늘어난다. 올해 2차 추경기준으로 국가채무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각각 965조원과 47.3%였으나,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해 1,068.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GDP 대비 비중도 내년에 처음으로 50%를 돌파한다. 이 비중은 이후로도 계속 늘어 2025년에는 58.8%에 이를 전망이다. 절대액으로는 1,408조원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에 묶어둔다는 방침이다.

〈표 1〉 재정총량

(단위: 조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본예산	2차추경				
총지출 (증가율)	558.0 (8.9)	604.9 (18.1)	604.4 (8.3)	634.7 (5.0)	663.2 (4.5)	691.1 (4.2)
총수입 국세수입	558.0 (8.9)	604.9 (18.1)	604.4 (8.3)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75.4 (△3.7)	△90.3 (△4.4)	△55.6 (△2.6)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112.5 (△5.6)	△126.6 (△6.2)	△94.7 (△4.4)	△104.7 (△4.7)	△108.4 (△4.7)	△109.2 (△4.6)
국가채무 (GDP 대비)	956.0 (47.3)	965.3 (47.3)	1,068.3 (50.2)	1068.3 (53.1)	1291.5 (56.1)	1,408.5 (58.8)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 예산안」;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1.9. 일부 내용 추가

2025년까지의 총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5.5%다.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의 비중은 2015년부터 점차 증가했으나, 2018년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25년까지 49%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량지출의 비중은 2015년 54%에서 2019년 49%대까지 줄어들었으며, 내년은 물론 2025년까지 50%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측됐다.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이 증가한 이유는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출소요가 꾸준히 확대되었기 때문이고, 반면 재량지출이 감소한 이유는 한시적 재량지출사업의 정상화, 유사·중복사업의 구조조정 등과 관련이 있다.

〈표 2〉 총지출 대비 의무·재량지출의 비중 추이 및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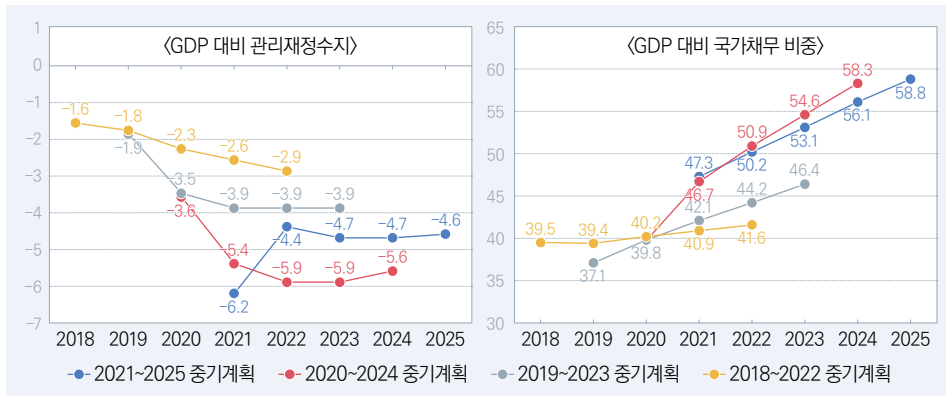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의무지출	46.0	47.3	49.2	50.6	50.1	49.9	47.7	49.8	49.1	49.3	49.6
재량지출	54.0	52.7	50.8	49.4	49.0	50.1	52.3	50.2	50.9	50.7	50.4

주: 2014~2021년 국회 확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최근 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림 1〉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비중 전망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최근 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8~2022, 2019~2023, 2020~2024, 2021~2025」

3. 분야별 자원배분

「2022년 예산안」의 분야별 자원배분을 살펴보면, 12대 분야의 지출 증가율이 모두 2021년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의 총지출 증가율(본예산 대비 8.3%)을 기준으로 교육(16.8%), 일반·지방행정(14.3%), 환경(12.4%), R&D(8.8%), 보건·복지·고용(8.5%) 분

야 순으로 지출 증가율이 높았다. 또한 산업·중소기업·에너지(6.0%), 외교통일(5.7%), 국방(4.5%), 문화·체육·관광(3.9%), SOC(3.8%) 분야의 경우 총지출 증가율에 미치지지는 못했지만 올해와 비교해서는 증가했다.

〈표 3〉 분야별 자원배분

(단위: 조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연평균 증가율 (2021~2025년)
			증감	%	2023년	2024년	2025년	
총지출	558	604.4	46.4	8.3	634.7	663.2	691.1	5.5
보건·복지·고용	199.7	216.7	17	8.5	232.2	246.1	259.3	6.7
교육	71.2	83.2	12	16.8	84.8	87.4	90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2	64.3	11.1	20.8				
문화·체육·관광	8.5	8.8	0.3	3.9	9.1	9.4	9.8	3.6
환경	10.6	11.9	1.3	12.4	12.9	13.7	14.5	8.2
R&D	27.4	29.8	2.4	8.8	32.3	34	35.4	6.6
산업·중소·에너지	28.6	30.4	1.8	6.0	32.6	35	36.4	6.2
SOC	26.5	27.5	1	3.8	28.7	29.5	30.2	3.3
농림·수산·식품	22.7	23.4	0.7	3.4	24	24.4	24.9	2.4
국방	52.8	55.2	2.4	4.5	57.7	60.3	63.1	4.5
외교·통일	5.7	6	0.3	5.7	6.2	6.4	6.6	3.8
공공질서·안전	22.3	22.4	0.1	0.3	23.4	24.3	25.1	3
일반·지방행정	84.7	96.8	12.1	14.3	100.4	103	105.8	5.7
지방교부세	51.8	64.1	12.3	23.9				

자료: 기획재정부, (2021.9), 「2022년 예산안」,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금번 예산안에서는 특히 △환경/R&D, △보건·복지·고용 △산업/중기 분야의 지출이 두드러졌다. 환경 분야는 저탄소 전환 등 2050 탄소중립, 대기, 물, 폐기물 등 생활환경 개선 등에 중점 투자하기 위한 사업 기반 마련으로 12대 분야 중 역대증가율이 가장 높았다(12.4%). 또한 R&D 분야는 한국판 뉴딜 2.0 기반 R&D투자 강화 및 미래 주력산업 육성·집중 확대에 따라 크게 증가했다(8.8%).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전 국민 접종을 위한 충분한 백신 확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방위 방역 지원,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등 소득·고용안전망 확충에 따라 2021년 대비 지출이 8.5% 증가했다. 증가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과 맞춤형 지원 등에 따라 산업/중기 분야 예산이 6%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4. 중점 투자사업

정부는 「2022년 예산안」에 코로나19 극복과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았다. 특히, 강한 경제, 민생버팀목에 근간을 둔 ① 더 강한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②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 ③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④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4대 투자중점을 선정했고 총 604.4조원이 투자된다. 2022년 예산의 12대 중점 프로젝트는 총 250조원 규모이며, 대표적으로 新 양극화 대응을 위한 중층적 사회안전망 강화에 83.4조원이, 진화하는 뉴딜과 한국판 뉴딜에 33.7조원이 각각 투자된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4대 패키지에 52.6조원이, 국민안전 3·3·3 프로젝트에 21.8조원이 각각 투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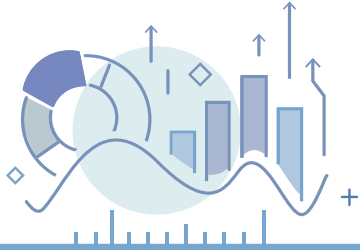
정부의 2022년 예산편성 및 국가재정운용방향을 종합해보면, 포스트코로나의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견인하고,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가시화해 미래를 대비함과 동시에 세수 회복력을 토대로 적극적 재정과 건전재정 기반회복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삶과 일상을 되찾고, 선도형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의지를 숫자로 표현한 셈이다.

〈그림 2〉 「2022년도 예산안」의 투자의 중점 및 12대 중점 프로젝트



QR코드 스캔 시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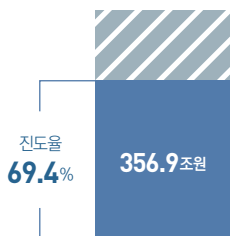
2021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지은초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anncho@kpfis.or.kr)

2021년 7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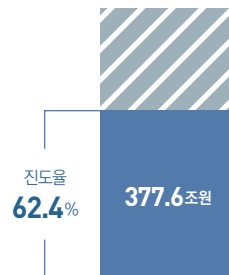
총수입 **356.9조원**
(누적 기준)

2021년 예산
514.6조원



총지출 **377.6조원**
(누적 기준)

2021년 예산
604.9조원



* 2021년 예산은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

20.7조원 적자
(누적 기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수치

전월 대비

+26.5
조원

관리재정수지

56.9조원 적자
(누적 기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수치

전월 대비

+22.8
조원

국가채무

914.2조원
(누적 기준)

중앙정부
채무 기준

전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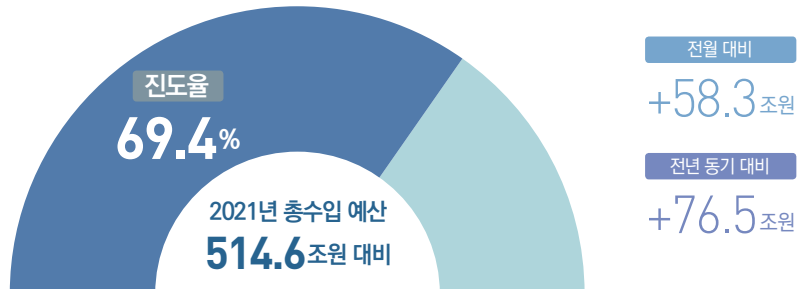
+16.1
조원

주: 구성항목별 합계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2021.9.).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총 수입

• 2021년 7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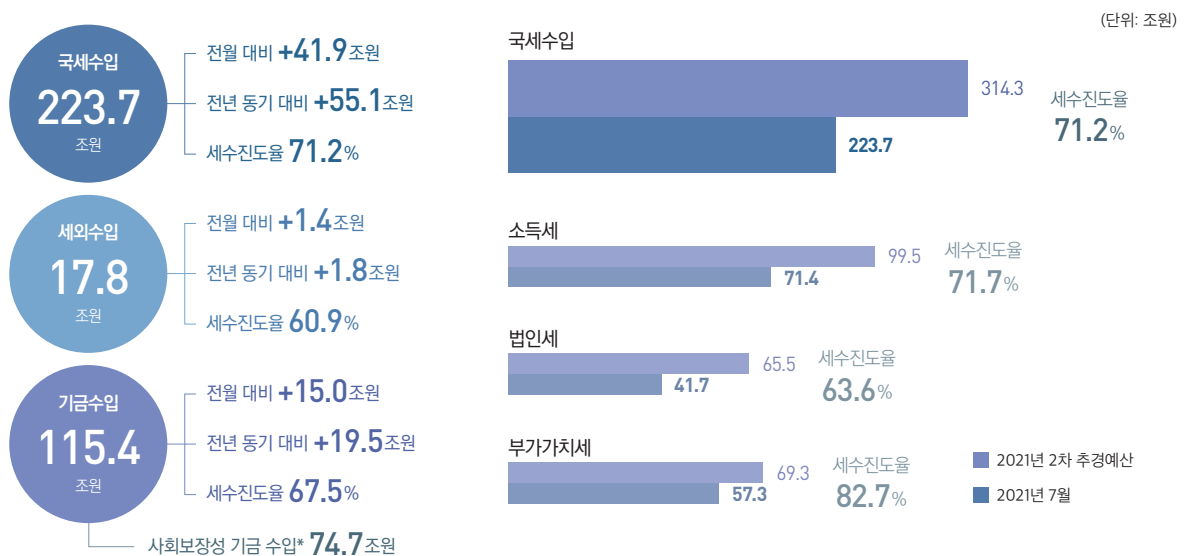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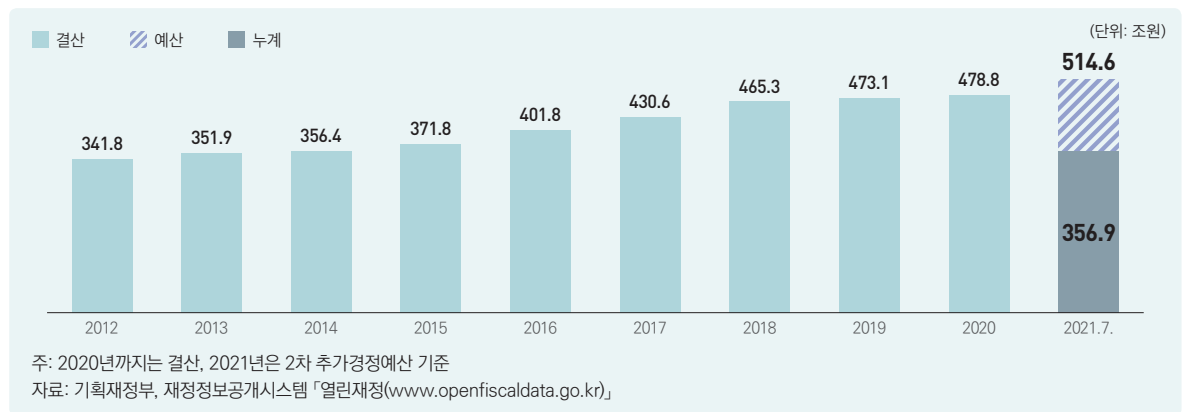
총수입
356.9
조원



주 1) 총수입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수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2) 2021년 예산은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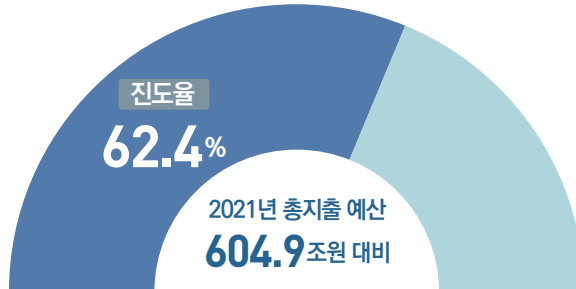
*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기금

주: 세수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 대비 당월 누계 세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총 지출

• 2021년 7월 말 기준

총지출
377.6
조원



전월 대비
+31.8조원

전년 동기 대비
+21.6조원

주 1) 총지출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지출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지출 규모의 비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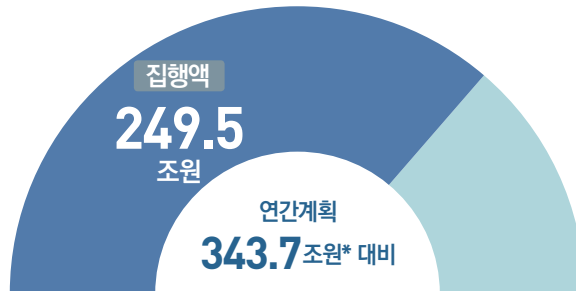
2) 2021년 예산은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go.kr)」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연간계획 대비
72.6%



전월 집행액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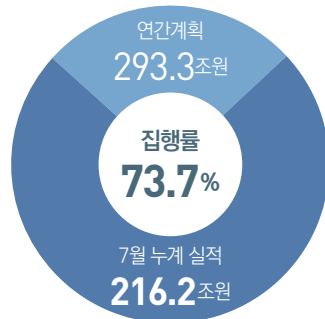
+15.3조원

전월 연간계획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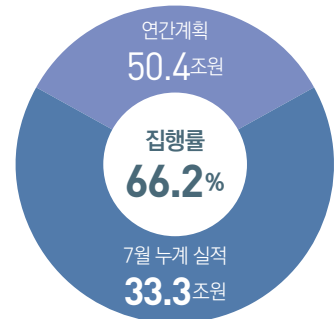
+4.4%p

* 2020년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연간계획 수정(341.8조원→343.7조원)

중앙부처



공공기관



(단위: 조원, %)

집행률
상위 5개 부처
(누적 기준)

	부처명	7월 실적	집행률
①	중소벤처기업부	12.3	85.2
②	고용노동부	5.6	83.5
③	산업통상자원부	8.5	83.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3	81.1
⑤	행정안전부	38.6	78.8

주 1)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47개 중앙행정기관과 40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사업비에 해당
(「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2) 집행률은 해당 연도의 연간 계획 대비 당월 누계 실적 규모의 비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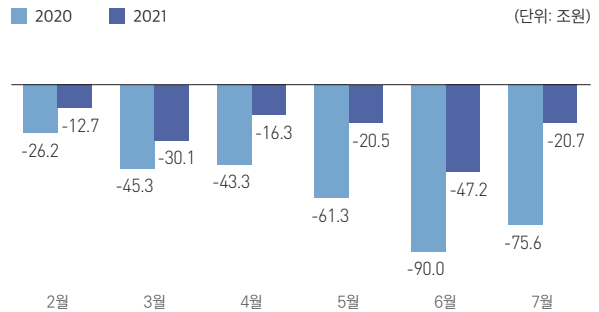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go.kr)」

재정수지

• 2021년 7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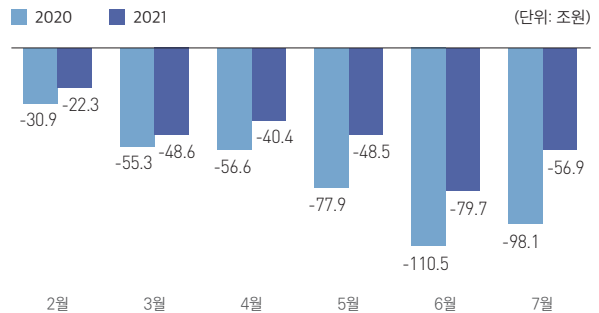
통합재정수지
20.7조원
적자

전월 대비
+26.5조원
전년 동기 대비
+54.9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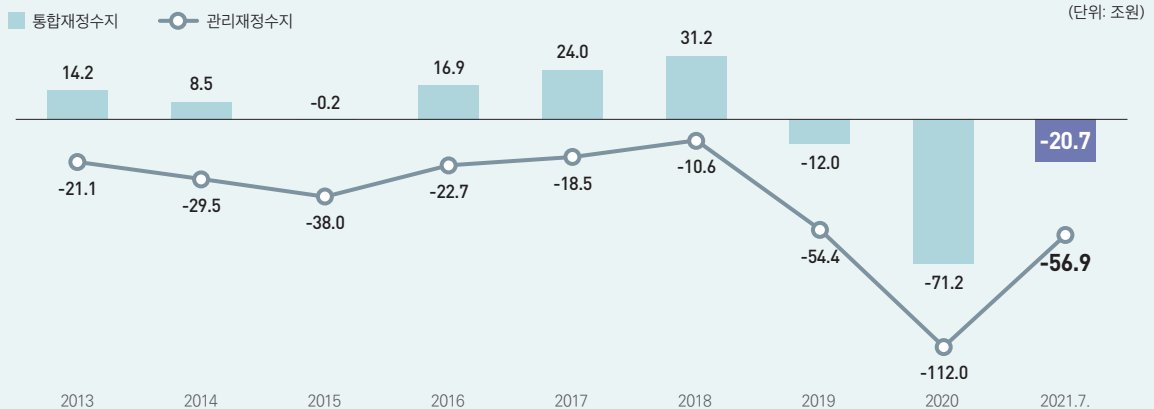
관리재정수지
56.9조원
적자

전월 대비
+22.8조원
전년 동기 대비
+41.2조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6.2조원
흑자

-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3)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2020년까지 결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국가채무

• 2021년 7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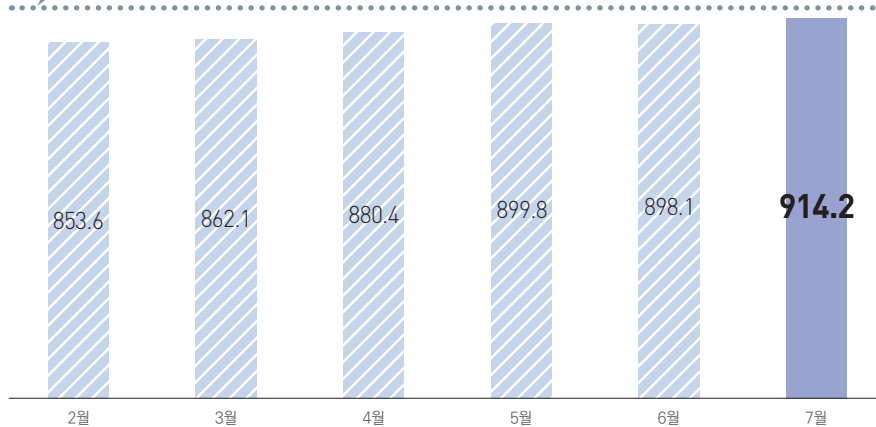
중앙정부 채무
914.2
조원

전월 대비
+16.1 조원

전년 대비
+95.0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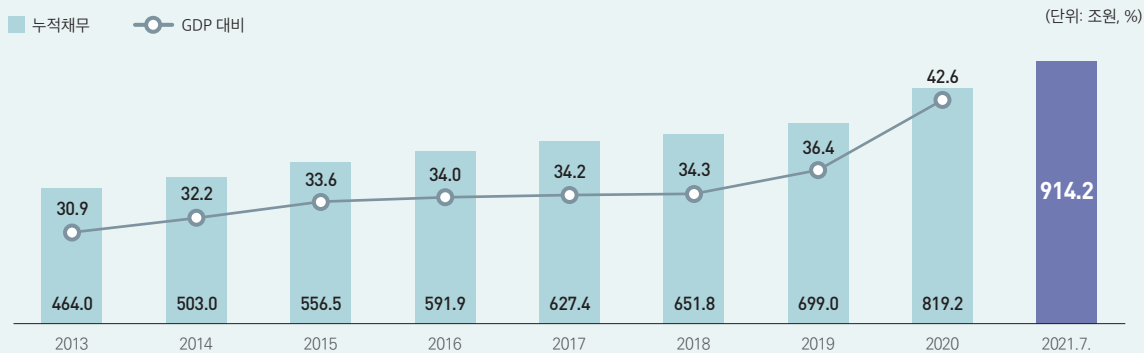
2021년 예산 기준, 중앙정부 채무 **937.8**조원

(단위: 조원)



주: 2021년 예산은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1) 중앙정부 채무 기준

2)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3) 누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은 정부의 예산, 집행, 결산에 대한 재정통계 및 시각화 자료와 재정 관련 보고서, 간행물 등 다양한 재정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국가재정통계 공식 플랫폼입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요 재정통계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조현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hyunheecho@kpfis.or.kr)



예산

정부는 지난 8월 31일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 「2022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했으며,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예산안은 정부의 시정연설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까지 국회에서 의결함으로써 확정됩니다.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입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예산에 대한 정보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개념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교실 > 예산 및 기금 > 예산의 이해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웹툰 > 예산 및 기금, 예산수립절차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교실 > 예산 및 기금 > 예산의 이해에서는 예산의 정의, 예산 구조, 예산 편성 과정과 예산 집행, 결산 등을 도표와 함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웹툰 > 예산 및 기금에서는 예산과 기금의 차이점을, 예산수립절차에서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재정배움	재정교실	재정웹툰	알기쉬운 나라살림
재정이란?	예산의 이해	기금의 이해	예산 및 기금 지침
예산 및 기금	■ 예산의 이해 — 예산이란 무엇인가?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이다. 즉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해서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국가의 재정활동은 예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므로 예산도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회계상 구분과 불합할 뿐 국가 예산이란 면에서 동일하므로 그 편성과정, 성립형식, 집행 등 운영원리가 사실상 동일하다. 또한 기금도 국회의 심의·의결 및 결산 심사를 받는다는 점에서 기금을 포함하여 광의의 예산으로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예산의 내용에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예산제도의 내용으로는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형식, 예산내용, 예산구조, 예산과정(편성·심의·집행·결산) 등이 있다. 기존의 예산제도는 (구)예산회계법 및 (구)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였으나 현재는 2007년 1월 시행된 국가재정법으로 되어 관리·운영하고 있다. ■ 회계연도 예산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편성된다. 따라서 예산은 당해연도 개시 전과 연도 경과 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예산 단년도주의 또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고 한다. 다만, 예산의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다음 회계연도 이후까지 지출이 허용되는 계속비, 이월비 등은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1967년 3월 예산회계법을 개정하여 회계연도를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으나 동년 10월 원상회복하는 것으로 법률을 재개정하여 실질적인 회계연도의 변경은 없었다. 회계연도의 개시 시기는 나라마다 다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우리와 같은 1월이고 뉴질랜드, 호주, 등은 7월, 캐나다는 4월, 미국 등은 10월부터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된다. ■ 예산의 형식 우리 나라 중앙정부 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통하여 성립하게 된다. 헌법 제54조에서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라고 예산의 성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 나라와 유사하게 예산이 국회의 의결 형식으로 성립하나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의 경우에는 예산이 법률로서 성립한다. 그러나 의결 형식이나 법률 형식 모두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예산은 성립 형식에 따라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예산은 당초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예산이며,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이다.		

청소년 재정배움	재정교실	재정웹툰	알기쉬운 나라살림
총 2건			
예산 및 기금 관리자, 2017-12-01		예산수립절차 관리자, 2017-12-01	



2 현황

알기 쉬운 재정 > 테마통계 > 자원별 세입예산 > 연도별, 3개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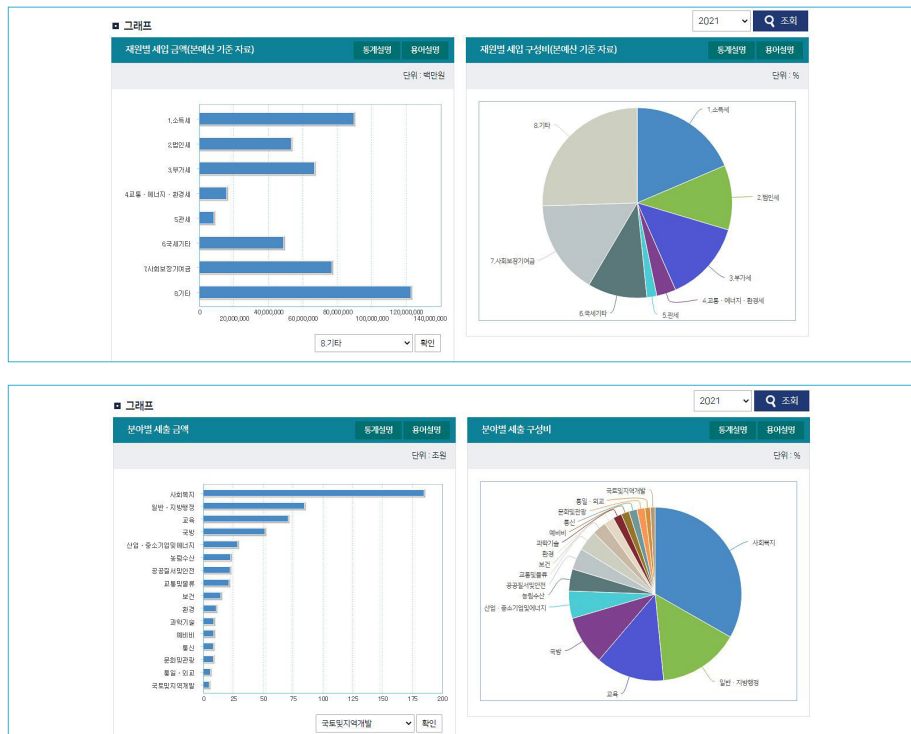
알기 쉬운 재정 > 테마통계 > 분야별 세출예산 > 16대 분야 연도별, 16대 분야 3개년 추이,

12대 분야 연도별, 12대 분야 3개년 추이

알기 쉬운 재정 > 테마통계 > 2021 예산특징

알기 쉬운 재정 > 테마통계 > 자원별 세입예산에서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의 각 연도의 자원별 세입 금액과 구성비를 그래프와 통계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한 연도를 기준으로 3개년 자원별 수입 추이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재정 > 테마통계 > 분야별 세출예산에서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의 각 연도의 분야별 세출 금액과 구성비를 그래프와 통계표로 볼 수 있습니다. 16대·12대 분야 3개년 추이에서는 선택한 연도의 분야별 세출예산을 원그래프로 보여주며, 원그래프 내 특정 분야를 클릭하면 해당 분야의 예산 3개년 추이가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또한 3년동안의 분야별 자원배분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통계표도 함께 제공합니다. 2022년 자원별 세입예산과 분야별 세출예산은 올해 말 예산이 확정된 이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재정 > 테마통계 > 2021 예산특징에서는 2021년 예산과 함께 2022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정책 등을 인포그래픽과 동영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3 데이터·문서자료

재정통계 > 상세재정통계DB > 예산 > 데이터자료 >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등 13건

재정통계 > 상세재정통계DB > 예산 > 문서자료 > 예산안(총괄) 등 26건

재정통계 > 상세재정통계DB > 예산에서는 예산 관련 각종 데이터 및 문서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데이터자료에서는 예산과 관련된 각 회계연도의 세부사업별 또는 세목별 세출/지출 예산편성현황,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 등 총 13건의 데이터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자료에서는 예산안, 조세지출예산서(안), 성인지예산서(안),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등 26건의 문서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정데이터링	서비스 유형	공표 시기	생산 기관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세출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년도 동안에 모든 수요에 충족하기...	SHARED Open API	연간	기획재정부 예산실
세출/지출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액) 세출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년도 동안에 모든 수요에 충족하기...	SHARED Open API	연간	기획재정부 예산실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 단년도, 세출/지출 예산편성 현황을 총지출 기준, 세출순계 기준으로 제공함...	SHARED Open API	연간	기획재정부 예산실
세출/지출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단년도, 세출/지출 예산편성 현황을 총지출 기준, 세출순계 기준으로 제공함...	SHARED Open API	연간	기획재정부 예산실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외화) 세출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년도 동안에 모든 수요에 충족하기...	SHARED Open API	연간	기획재정부 예산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데이터 열람 메타정보 열기

SHEET OPEN API

회계년도 2022 조회

세부조건 열기

XML JSON XLS CSV TXT

No	회계년도	소관명	회계명	계정명	분야명	부문명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경비구분	정부안금액(천원)
1	2022	5 - 18민주...	일반회계	일반 - 지...	일반행정	518 진상규명조...	518 진상규명 지원	518 진상규명지원	주요사업비(기금사...		5,642,000
2	2022	5 - 18민주...	일반회계	일반 - 지...	일반행정	518 진상규명조...	기본경비	위원회 기본경비	기본경비(경상운영비)		4,420,000
3	2022	5 - 18민주...	일반회계	일반 - 지...	일반행정	518 진상규명조...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	인건비(기금인건비)		3,866,000
4	2022	가습기살균...	일반회계	일반 - 지...	일반행정	기관운영	기관운영	기관운영 기본경비(...	기본경비(경상운영비)		3,094,000
5	2022	가습기살균...	일반회계	일반 - 지...	일반행정	기관운영	기관운영	기관운영 기본경비(...	기본경비(경상운영비)		1,687,000
6	2022	가습기살균...	일반회계	일반 - 지...	일반행정	기관운영	인건비	인건비(총액)	인건비(기금인건비)		5,086,000
7	2022	가습기살균...	일반회계	일반 - 지...	일반행정	사회적참사 조사	대외 소통	대국민 소통 강화	주요사업비(기금사...		79,000
8	2022	가습기살균...	일반회계	일반 - 지...	일반행정	사회적참사 조사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세월호참사 진상규...	주요사업비(기금사...		1,856,000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자료		문서자료	
1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1	예산안(총괄)
2	세출/지출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액)	2	예산안 첨부서류
3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	3	예산안 개요
4	세출/지출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4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5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외화)	5	조세지출예산서(안)
6	세출/지출 세목 예산편성현황(외화)	6	예산안 독립기관 및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 감액규모
7	세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추경포함)	7	기타 예산관련 문서
8	세출 세목 예산편성현황(추경포함)	8	성인지예산서(안)
9	정부발주사업정보	9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10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액)	10	기금운용계획안(총괄)
11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11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
12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외화)	12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3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추경포함)	13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참고자료
		14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안)
		15	추가경정예산안
		16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17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8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사업별 설명서(안)
		19	예산
		20	나라살림 예산개요
		21	나라살림 예산개요 참고자료
		22	기금운용계획
		23	추가경정예산
		24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25	국가재정운용계획
		26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

4

기타 정보

재정자료실 > 재정 보고서·간행물 > 예산(나라살림) 재정자료실 > 보도자료 > '예산' 검색 

재정자료실 > 재정 보고서·간행물 > 예산(나라살림)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각 연도 예산개요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총 21건의 예산개요 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각 연도의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나라살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2022년도 나라살림은 올해 말 예산이 확정된 이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

기획재정부 2021-02-09

☐ 0_목차
☐ 1_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 2_나라살림
☐ 3_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바로가기

총 21건

Q 검색

번호	제목	출처	발간일자
21	2021년도 예산	기획재정부	2021-02-09
20	2020년도 예산	기획재정부	2020-02-07
19	2019년도 예산	기획재정부	2019-01-31

예산과 관련한 재정당국의 주요 발표자료는 재정자료실 > 보도자료에서 '예산'으로 검색하면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과 같은 총 883건의 정부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총 883건

Q 검색

제목	장부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
핵심사업평가 결과 '2022년도 예산안, 반영 주...		재정관리총괄과	2021-09-06	35
2022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안 주요내용		연구개발예산과	2021-09-02	2
2022년도 국민참여예산 총 71개 사업, 1,414억원 ...		참여예산과	2021-09-02	2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 2022년 예산안 및 202...		예산정책과	2021-08-31	43

이달의 이슈키워드

거점 국립대학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의 데이터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거점국립대학' 언급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가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를 통해 재정지원대학을 발표하면서 권역별 선정원칙을 적용한 데다,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거점국립대학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연관 키워드로는 '대학기본역량진단', '지방', '재정지원제한대학' 등이 도출됐다. 이번 호 「나라재정」에서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정부의 대학 지원 재정사업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서영훈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youngseu@kpfis.or.kr)



연관어

대학기본역량진단

지방

재정지원제한대학

교육부

진단평가

입시

학생

지원

학교

지원계획

경제

경제활성화

기관

지역

주지하다시피, 정부는 「2021 대학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일반대학 136개교와 전문대학 97개교 등 총 233개교를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은 앞으로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27~48억원을 지원 받게 된다. 반면, 이번 진단에서 탈락한 52개 대학은 3년간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한, 평가에 아예 참여하지 않은 34개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받는다.

2021년 일반재정 지원대학 선정 결과

(단위: 개교)

선정	권역별	일반대학					전문대학				
		수도권	대·경·강원권	부·울·경남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수도권	대·경·강원권	부·울·경남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51	19	19	27	20	33	15	18	15	16
	합 계	136					97				
미선정		25					27				
미참여		25					9				
진단대상		186					133				

자료: 교육부(2021),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재구성

정부는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에서 우수한 지역대학을 선정하기 위해 5대 권역을 구분하고, 권역 비율을 확대하여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하였다. 정부는 아울러, 지역대학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지역대학 지원 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거점국립대학에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기여 △고등교육 기회보장 △기초·보호 학문 육성 등 국립대학의 공적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립대가 지역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학 지원 관련 2021년 재정사업

정부는 지역과 대학이 동시에 성장하며, 지역인재를 키워내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대학 특성화 △지역산업 연계 △지역공헌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학의 역할을 강화 중이다. 이를 위해, 2021년에는 △지역 대학연계 △연구 경쟁력 강화 △국립대학 지원 강화 등의 재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 지원 관련 정부예산 현황 및 추이

(단위: 억원)

관련 사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	-	-	-	1,710
4단계 두뇌한국사업	2,985	2,978	2,967	3,768	4,216
국립대학육성사업	210	800	1,504	1,425	1,500

자료: 열린재정, (2021), 「사업예산 시계열」 재구성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및 대학 혁신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2021년부터 독립사업¹으로 신설하여 1,710억원을 편성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현상을 막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대전·세종·충남 △울산·경남 △충북 △광주·전남 등으로 총 8개 광역자치단체 4개 플랫폼으로 추진된다.

올해 새로 선정된 대전·세종·충남 플랫폼은 충남대 등 24개 대학과 카카오모빌리티 등 68개 혁신기관이 참여하여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한다. 대전의 연구·기술개발, 충남의 제조업 역량, 세종의 자율주행실증특구 등 실증기술과 연구개발 환경을 활용하여 플랫폼을 운영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울산·경남 플랫폼은 경상국립대 등 17개 대학과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46개 지역혁신기관이 함께하며, △스마트제조 △모빌리티 △제조정보통신기술 △스마트공동체 △저탄소그린에너지 등 5개 핵심분야를 설정했다. 특히, 울산·경남형 공유대학에 이들 핵심분야와 관련있는 8개 전공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산업에 이바지할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².

충북 플랫폼은 충북대 15개 대학과 충북교육청 등 44개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한다. 지역 바이오 산업기반에 맞춰 △제약·바이오 △정밀 의료기기 △화장품·천연물 등을 핵심분야로 선정했으며, ‘충북 바이오헬스산업 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바이오산업의 수요와 공급을 매치하여 지역정착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광주·전남 플랫폼은 △에너지신산업 △미래형운송기기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하였다. 전남대, 목포대 등 15개 대학과 한국전력공사 등 32개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광주·전남

1. 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로 편성되어 있었다.

2. 기계설계해석, e모빌리티, 지능로봇, ICT, 스마트도시건설, 공동체혁신, 모빌리티, 저탄소그린에너지 전공 등이다.

플랫폼은 대학이 운영하는 공동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애주기적 인력양성체계를 지원하는 것이 눈에 띈다.

● 4단계 두뇌한국사업

4단계 두뇌한국사업은 7년 단위로 진행되는 BK21 사업의 네 번째 사업이다. 정부는 4,216억 원을 편성하여, 모든 학문 분야의 혁신성장을 이끌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한다. 교육연구단(팀) 지원 규모는 65개 대학, 578개 팀이며, 대학원 혁신지원대학은 총 20개 대학이다. 해당 사업은 크게 △미래인재 양성사업 △혁신인재 양성사업 △대학원 혁신지원비 등으로 나뉜다.

첫째, 미래인재 양성사업은 핵심분야 연구역량 제고 및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 인문사회 등의 분야에서 373개 교육연구단(팀)을 지원하며, 매년 1만 2,600여 명의 대학원생이 참여하게 된다. 교육연구단 구성에는 참여학과 전체 교수의 70% 이상, 교육연구팀 구성에는 참여학과 소속 교수 3인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둘째, 혁신인재 양성사업은 혁신성장 선도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문제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할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목적이다. 207개 내외의 교육연구단과 연간 6,400명의 대학원생을 지원한다. 신청조건은 신청한 교육연구단(팀)에 등록된 박사학위 과정생이 있어야 하며, 참여 교수가 7인 이상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원 혁신지원비사업은 대학원 차원의 제도개혁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연구중심 대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문 분야 간 융합을 촉진하고 대학원 본부가 제도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한다. 제도개혁 비용은 연차별 평가에 따라 매년 다르게 지급한다. 대학원 혁신영역 평가는 전국 및 지역 단위 구분 없이 실시하나, 혁신지원비는 분리하여 지급한다.

● 국립대학육성사업

국립대학육성사업은 국립대가 우수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에 1,500억원을 편성했으며,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지원한다. 참여 대학은 국가거점대 9개교, 국가중심대 18개교, 교원양성대 11개교로 총 38개교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국립대가 지역사회 기여, 고등교육 기회보장 등과 같은 공적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국립대 교육 및 연구의 질을 높혀 미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간 연계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미국과 EU의 2022년 예산 및 자원배분 특징

조현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hyunheecho@kpfis.or.kr)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기는 늘 승자와 패자를 갈랐다.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위기도 마찬가지다. 각국 정부는 위기 이전의 성장경로로 복귀하기 위해 2020~2021년 전무후무한 재정을 투입했고, 위기의 끝이 보이는 내년에는 저마다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고 있다. 그 약속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 각국의 내년 예산안이다. 한국 정부도 604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이달 초 국회에 제출했다. 예산 편성 방향은 △위기 이전의 일상과 삶을 되찾는 '회복' △회복의 온기를 경제 전반에 나누는 '상생' △경제·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미래로 나아가는 '도약'으로 정했다. 이번 호 해외재정동향에서는 선진국 그룹의 위기 대응을 견인하고 있는 미국과 EU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 특징, 방향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미국의 2022회계연도 예산안

미국의 2022회계연도 예산안¹은 국가 생산성 증대를 위한 주요 투자를 강조하면서 장기 재정 건전성도 고려됐다. 중점 투자방향은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²과 미국 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³을 바탕으로 국가 인프라 재건과 국가 생산성 증대를 위한 가족 관련 지원으로 설정했다.

2022회계연도 재정수입은 전년(3조 5,808억달러, GDP 대비 16.3%) 대비 16.6% 증가한 4조 1,742억달러(GDP 대비 17.8%)로 전망됐고, 재정지출은 전년(7조 2,495억달러, GDP 대비 32.9%) 대비 17.1% 감소한 6조 111억달러(GDP 대비 25.6%)로 편성했다. 이 중 개별 법령에 의해 결정되는 의무지출은 4조 180억달러로 전년(5조 2,510억달러) 대비 23.5% 줄어든 반면, 재량지출은 1조 6,880억달러로 전년(1조 6,960억달러)과 비교하여 0.5% 감소하였다. 재량지출 중 국방 예산은 전년(7,350억달러) 대비 2.9% 증가한 7,560억달러, 비국방예산은 전년(9,600억달러) 대비 2.9% 감소한 9,320억달러이다.

재정지출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보장지출 △소득보장 △보건 △메디케어 △국방 분야 순으로 큰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사회보장지출 분야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1조 2,032억달러로 총 재정지출의 20.0%를 차지한다. 소득보장 분야는 전년 대비 48.9% 감소한 9,839억달러로 총 재정지출 중 16.4%이다. 소득보장 분야 중 실업수당(Unemployment compensation)과 주거지원(Housing assistance), 식품·영양지원(Food and nutrition assistance) 항목의 지출은 감소했으며, 퇴직·장애 보험(General retirement and disability insurance)과 공무원 퇴직·장애 지원(Federal employee retirement and disability) 항목의 지출은 늘었다. 보건 분야는 8,625억달러(전년 대비 3.1% 증가)가 편성됐으며 총 재정지출 대비 14.4%를 차지한다. 보건 분야 내에서는 의료 서비스(Health care services), 보건 연구·교육(Health research and training) 관련 지출이 증가했으며, 소비자 및 직장 보건·안전(Consumer 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지출은 줄었다. 메디케어 분야는 전년 대비 8.0% 증가한 7,741억달러이며, 지출 비중은 12.9%다. 이 분야 지출액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26년에는 1조달러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 지출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7,706억달러로 총 재정지출 대비 12.8%를 차지하며, 2026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된다.

¹ 미국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에서 2021년 5월 28일에 발표했다.

² 지난 3월 31일에 발표한 바이든표 부양책 중 하나이며, △인프라 재건 △미래의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중국과의 경쟁 우위 등을 목표로 향후 10년간 약 2.6조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다.

³ 지난 4월 28일에 발표한 바이든표 부양책 중 하나로 중산층의 교육 및 보육 지원과 무상교육 확대 등의 분야에 향후 10년간 1.8조달러 규모가 투자된다.

〈표 1〉 2022회계연도 미국 예산안 기능별 지출 규모

(단위: 백만달러, %)

기능별 지출 (Outlays By Function)	추정	전망	증감	
	2021회계연도(a)	2022회계연도(b)	금액(b-a)	증감률
국방 (National Defense)	748,480	770,567	22,159	3.0
국제관계 (International Affairs)	51,668	59,001	7,333	14.2
과학, 우주, 기술 (General Science, Space and Technology)	38,239	41,678	3,439	9.0
에너지 (Energy)	6,144	19,330	13,186	214.6
천연자원, 환경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47,102	69,167	22,065	46.8
농업 (Agriculture)	65,569	32,530	-33,039	-50.4
상업, 주택융자 (Commerce and Housing Credit)	384,665	26,552	-358,113	-93.1
교통 (Transportation)	178,057	148,622	-29,435	-16.5
지방, 지역발전 (Community and Regional Development)	92,930	72,025	-20,905	-22.5
교육, 훈련, 고용, 사회서비스 (Education, Training, Employment, and Social Services)	271,141	247,024	-24,117	-8.9
보건 (Health)	836,241	862,545	26,304	3.1
메디케어 (Medicare)	716,908	774,116	57,208	8.0
소득보장 (Income Security)	1,926,462	983,891	-942,571	-48.9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1,141,177	1,203,206	62,029	5.4
제대군인 (Veterans Benefits and Services)	236,279	290,383	54,104	22.9
법무 (Administration of Justice)	83,427	74,649	-8,778	-10.5
일반정부 (General Government)	325,646	111,066	-214,580	-65.9
순이자 (Net Interest)	303,002	304,939	1,937	0.6
기타(상계처리)	-203,609	-80,143	123,466	-60.6
재정지출(Total Outlays) (GDP 대비 비율)	7,249,456 (32.9)	6,011,148 (25.6)	-1,238,308	-17.1

자료: OMB. (2021), 'Fiscal Year 2022 Budget of the U.S. Government', - Historical Table, Table 3.2

2022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는 1조 8,370억달러로 전년(3조 6,687억달러) 대비 49.9%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규모도 2021회계연도의 16.7% 보다 8.9%p 줄어든 7.8% 수준이 될 전망이다. 연방정부 채무(Debt Held by the Public)는 전년 추정치(24조 1,670억달러, GDP 대비 109.7%)보다 8.7% 증가한 26조 2,650달러이며 GDP 대비 111.8% 수준으로 예상된다.

2. EU의 2022회계연도 예산안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지속가능한 경제회복 강화 △일자리 창출 △그린 및 디지털 전환 등에 중점을 둔 2022년 예산안⁴을 지난 6월 발표했다. △유럽 녹색 협약 △디지털 시대에 맞는 유럽 △모두를 위한 경제 △유럽식 생활방식의 증진 △세계 속에 강한 유럽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노력 등 EU가 2022년에 추구하는 6가지 주요 목표를 제시했다.

2022년 EU 예산안은 승인기준⁵ 1,678억유로로 EU 27개국 GNI 대비 1.12%이며, 2021년(1,688억유로) 대비 0.6% 감소했다. 지급기준⁶으로는 전년도 1,706억유로에 비해 0.7% 감소한 1,694억유로다. 이는 EU 27개국 GNI 대비 1.1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차세대 EU(Next Generation EU)에 1,184억유로를 지원해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고, 녹색과 디지털 전환에 집중한다. 또한,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530억유로, 유럽해양산양식기금(European Maritime, Fisheries and Aquaculture Fund)에 9.7억유로를 편성하여 농·어업민과 농수산업 분야를 강화한다. 이와 별도로 경제회복기금에서 유럽농촌개발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에 57억유로를 추가 지원한다. 지역 개발 및 통합에는 365억 유로를 편성하고, 위기 대응 및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EU에서 REACT-EU(Recovery Assistance for Cohesion and the Territories for Europe)에 108억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근린국가 지원, 개발원조, 국제협력(Neighborhood,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strument-Global Europe, NDICI-Global Europe)에 125억유로, 자연재해 등 인도적 원조(Humanitarian Aid)에 16억유로 등 국제사회 지원 및 협력을 위해 148억유로를 투자하는 것도 특징이다. 핵심 연구 프로그램(Horizon Europe)에 122억유로 등 연구·혁신 분

⁴ 유럽 집행위원회(EC)에서 2021년 6월 8일 2022년 예산안과 함께 「EU Budget 2022: Speeding up Europe's recovery and progressing towards a green, digital and resilient future」를 발표하였다.

⁵ Commitment Appropriations로 해당 연도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한다.

⁶ Payment Appropriations로 해당 연도에 실제 지출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한다.

야에 131억유로를 편성했다. 아울러 유럽전략투자를 목적으로 55억유로를 편성했는데, 세부적으로는 InvestEU 프로그램 12억유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유럽연결시설(Connecting Europe Facility) 28억유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 12억유로 등이다. 사람·사회통합·가치에는 179억유로를 지원하며, 고용·기술·사회적 통합을 위한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Plus)에 133억유로, 청년의 교육훈련 및 기술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Eramus+)에 34억유로, 예술가·창작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4억유로 등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유럽 우주프로그램 20억유로 △환경 및 기후대응 19억유로 △국경 관리 19억유로 △EU 가입후보국 및 잠재적 가입후보국 지원 19억유로 △이민 관리 13억유로 △방위 12억유로 등이 편성돼 있다.

지난 7월 EU 이사회는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채택했으며, 승인기준으로 집행위원회 예산안 대비 1억 3,133만유로 감액된 1,676억유로, 지급기준으로 5억 7,451억유로 증액된 1,699억유로로 채택했다. 기타 특수 기금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감액됐고, 승인기준으로는 국제사회 기여(Neighborhood and the World) 항목의 감액 규모가 컸으며, 지급기준으로는 통합, 복원력 및 가치(Cohesion, Resilience and Values) 항목에서 크게 감액됐다⁷. 이후 이사회가 서면 의견서를 9월 6일까지 의회에 전달하고, 10월에 의회의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⁷ EC, 2022 EU budget: Council agrees its position, (2021.7.14.)

〈표 2〉 2022년 EU 예산안

(단위: 백만유로, %)

구분	추정	전망	증감	
	2021년(a)	2022년(b)	금액(b-a)	증감률
승인기준(Commitment Appropriations)				
1. 단일시장, 혁신 및 디지털 (Single Market, Innovation and Digital)	20,817	21,644	827	4.0
2. 통합, 복원력 및 가치 (Cohesion, Resilience and Values)	53,078	56,099	3,021	5.7
2a. 경제·사회·지역 통합 (Economic, Social and Territorial Cohesion)	48,191	49,706	1,515	3.1
2b. 복원력 및 가치 (Resilience and Values)	4,887	6,392	1,505	30.8
3. 천연자원 및 환경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58,571	56,097	-2,474	-4.2
4. 이주 및 국경관리 (Migration and Border Management)	2,279	3,124	845	37.1
5. 안보 및 국방 (Security and Defence)	1,709	1,785	76	4.4
6. 국제사회 기여 (Neighborhood and the World)	16,097	16,698	601	3.7
7. 일반 행정 (European Public Administration)	10,443	10,845	402	3.9
기타	5,764	1,500	-4,264	-74.0
합계 (EU 27개국 GNI 대비 비중)	168,757 (1.20)	167,793 (1.12)	-964	-0.6
지급기준(Payment Appropriations)				
1. 단일시장, 혁신 및 디지털 (Single Market, Innovation and Digital)	17,192	21,729	4,537	26.4
2. 통합, 복원력 및 가치 (Cohesion, Resilience and Values)	66,362	62,219	-4,143	-6.2
2a. 경제·사회·지역 통합 (Economic, Social and Territorial Cohesion)	61,868	56,350	-5,518	-8.9
2b. 복원력 및 가치 (Resilience and Values)	4,494	5,870	1,376	30.6
3. 천연자원 및 환경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56,806	56,508	-298	-0.5
4. 이주 및 국경관리 (Migration and Border Management)	2,686	3,121	435	16.2
5. 안보 및 국방 (Security and Defence)	671	1,238	567	84.6
6. 국제사회 기여 (Neighborhood and the World)	10,811	12,407	1,596	14.8
7. 일반 행정 (European Public Administration)	10,444	10,845	401	3.8
기타	5,586	1,323	-4,263	-76.3
합계 (EU 27개국 GNI 대비 비중)	170,558 (1.21)	169,392 (1.14)	-1,167	-0.7

자료: EC. (2021), 「DRAFT Union's annual budget for financial year 2022 – Total Expenditure」, 2. Overview of the 2022 budget by MFF heading, pp.6



데이터 생태계의 나침반, 통합 데이터 지도

dBrain운영본부 기술지원부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를 중심에 놓고 새로운 성장문법을 모색하는 전략이다. 본 코너는 데이터와 관련한 신기술, 정부정책, 데이터 댐, 산업동향 등을 전한다. 미국의 뉴딜정책이 전기를 값싼 공공재(Electricity for All)로 만들어 공장·가정에 공급했듯이, 본 코너는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쉽게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모두를 위한 데이터(Data for All)’를 꿈꾼다. 이번 호는 데이터 생태계의 나침반이라 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 지도에 대해 다뤄본다.

‘통합 데이터 지도’는 단어가 의미하는 그대로 데이터를 잘 찾기 위한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가 제공하는 데이터 검색 서비스이다. 통합 데이터 지도는 누리집(bigdata-map.kr)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데, 소개란에서 사업의 목표를 “통합 데이터 지도는 데이터 생태계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 댐에서 쉽게 찾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업 목표에서 설명하는 데이터는 무엇이길래 검색·활용을 하기 위한 나침반까지 필요한 것일까? 정부는 다양한 데이터 확보 및 구축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데이터 스토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 구축·수집된 데이터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기에 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통합 검색 기능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었다.

빅데이터 플랫폼

- 2019년 10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2020년 10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3,246종 데이터 축적·개방
- 2020년 6개 분야 신규 빅데이터 플랫폼 추가 구축
- 2021년 6대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약 700종 데이터 개방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 2018년 11종 데이터 구축
- 2019년 10종 데이터 구축
- 2020년 170종 데이터 구축 (4억 8,000만건)
- 2021년 150종 추가 구축
- 2025년까지 총 1,300종 데이터 구축

데이터 스토어

- 14개 분야로 구성
- 파일 1,777종
- API 349종
- 이미지 100,639건
- 데이터 판매 기업 401개
- 데이터 가공 기업 730개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데이터 스토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데이터가 쌓였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쌓일 예정이다. 이런 데이터들을 한곳에서 편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통합 데이터 지도이다.

통합 데이터 지도의 구체적 필요성을 빅데이터 플랫폼의 예로써 설명할 수 있다. 현재 구축된 16개 분야의 플랫폼은 각자의 누리집에서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다. 관심이 많은 이용자가





아니라면 어떤 분야가 준비되어 있는지 파악이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찾는 데이터가 여러 분야의 경계에 있는 모호한 데이터라면 해당 분야 플랫폼들을 다 찾아다녀야 하는 수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분야별 누리집 주소도 일일이 알고 있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 외에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데이터 스토어, 민간 데이터 상품 등도 데이터를 각자 제공한다는 점은 통합 데이터 지도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이런 이유 등으로 정부는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쉽고 빠르게 데이터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합 데이터 지도는 2020년 3월 10개의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첫 선을 보인 이후로 꾸준히 서비스를 확대해 오고 있다. 2021년 2월에는 6개의 빅데이터 플랫폼이 추가되었고 AI 허브, 데이터 스토어가 연계됐다. 4월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투자 빅데이터,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등 공공기관의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됐으며 7월에는 민간 데이터 서비스·유통기업 쿠팡의 쿠팡닷컴에서 거래되는 데이터 상품도 연계됐다.

그렇다면 통합 데이터 지도에서 검색은 어떻게 할까? 누리집(bigdata-map.kr)에 접속하면 검색이라는 고유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구성된 단출한 검색창만 볼 수 있다. 검색창에 원하는 데이터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를 목록 형식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업’이라는 단어로 조회를 하면 AI 허브의 [환경자원 > 동식물 - 농업], 데이터 스토어의 [경제금융 > 기업 - 농업(A01) 기업 DB],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경제금융 > 기업 - 농업 기업체조가 500m 격자집계] 등이 검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특별한 조작이나 구분 없이 빅데이터 플랫폼, AI 허브, 데이터 스토어 등에서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 정보를 한군데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검색된 결과에서 바로가기를 통해 정보 제공 누리집으로 바로 이동도 가능하다. 여러모로 사용자의 편의성이 고려된 것을 알 수 있다.

통합 데이터 지도 누리집의 사업추진 경과 및 기대효과로는 “이용자는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한곳에서 쉽게 찾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르네상스가 도래하는데 대한민국이 이를 선도하는 모델 국가로 우뚝 서는데 일조할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하루 빨리 빅데이터 플랫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등이 통합 데이터 지도를 통해 빛을 발하는 디지털 르네상스가 도래하길 기대해본다.

참고 문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12.16.), “데이터 댐 통해 데이터-인공지능 강국 도약...성과보고회”, URL: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117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2.22.), “신규 6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700종 추가 개방”, URL: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425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6.18.), “사투리·국내 주요도로 등 AI 학습용 데이터 170종 개방”, URL: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894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7.22.), “통합 데이터지도와 민간 데이터 유통 플랫폼 첫 연계”, URL: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910>

모든 국민이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남점순 과장을 만나 사회보장위원회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글. 정재림 일러스트. 강태이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위원회

Interview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남 점 순
과장



*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 인터뷰로 진행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이끄는 사회보장위원회

우리나라는 1996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설립했다. 그러나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국민들의 수요가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졌고, 사회보장정책도 여러 부처에 확대됐다. 이에 2013년에 「사회보장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고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사회보장정책의 심의·조정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가 출범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주요 사회보장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등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방향 수립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남점순 과장은 2013년에 이루어진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조정기구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설

명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본위원회 아래에 실무위원회와 5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년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격년으로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공표합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국가 전체의 사회보장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협의·조정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조정제도의 경우, 제도 도입 당시인 2013년에는 61건의 협의 요청이 있었으나 국민의 복지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2020년에는 1,088건의 협의 요청이 접수될 정도로 협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그간의 성과와 현 주소

그동안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의 기본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다양한 현금·현물지원 등 핵심 사회보장제도 대부분을 도입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기초연금, 맞춤형 개발급여 도입 등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치매국가책임제 등으로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켰다. 무상보육 실시, 아동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등으로는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완화했다. 이처럼 생애주기별 다양한 정책대상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비교한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OECD 기준에 따라 9대 정책영역(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실업, 주거, 기타 사회정책)별 공공·민

간의 사회복지지출을 산출한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9년 233.5조원(잠정치) 규모로 2018년 205.2조원(잠정치)보다 13.8% 증가했다. 이는 GDP 대비 12.2%에 해당하며 OECD 평균 대비 61%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증가율은 연평균 9.6%로 OECD 평균 4.7%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분야가 나아갈 길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사회로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데이터(D), 네트워크(N), 인공지능(A)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6월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통해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사회보장 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규모

(단위: 조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공공사회복지지출	금액	171.8	185.5	205.2	233.5
	GDP 대비	9.9	10.1	10.8	12.2

자료: OECD.Stat, Social Expenditure(<https://stats.oecd.org>), 2021.9 기준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비교

(단위: %)

구분	한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영국	미국	OECD 평균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¹⁾	12.2	31.0	25.9	25.5	22.3 ²⁾	20.6	18.7	20.0
연평균 증가율 ³⁾	9.6	2.8	3.1	3.6	2.7	3.4	4.7	4.7

주 1) 2019년 잠정치 기준

2) 일본은 2019년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2017년 자료 활용

3) 최근 10년간(2007~2017년) 연평균 증가율

자료: OECD.Stat, Social Expenditure(<https://stats.oecd.org>), 2021.9 기준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의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야의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분석하여 개인별 사회 보장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일컫습니다. 인구·가구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비롯해 소득보장, 서비스보장, 사회보험 관련 정보의 표본을 추출·가명 처리하여 개인 단위로 연계한 국민 빅데이터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표본을 구축하여 ‘작은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각부처·기관이 보유한 행정데이터를 연계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의 사회보장 정책 수립과 평가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재 어떠한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지도’라고 할 수 있지요.”

그동안 사회보장제도의 소관 부처에 따라 데이터가 분절되어 있어 국민 입장에서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한눈에 살펴보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가구 구성에 따라 필요한 사회보장급여가 제대로 충족되어 있는지 진단할 수 있다.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수집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범위를 규정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재·개정하여 2022년부터는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보장 기초분석을 포함해 심층분석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남점순 과장에게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가 나아갈 방향을 물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OECD 평균에 비해 여

전히 낮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난 10년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지적되어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사회보장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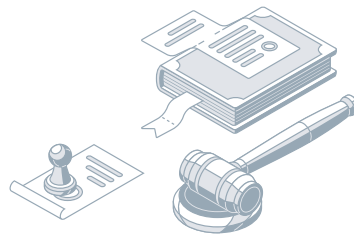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의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중적으로 공론화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2020년에는 장시간 노동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쉬지 못하고 아픈 개인이 늘어남에 따라 ‘쉬어도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해 상병수당 도입 가능성 등의 대안적 복지제도를 탐색했다.

또한 올해는 한국 사회의 다차원적 불평등의 원인을 탐색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인 가구처럼 비전통적 형태의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사회보장체계를 보완하고 질 좋은 ‘사회적 돌봄’을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역할도 활발하게 탐색 중이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드러냈습니다. 아파도 충분히 휴식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고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동체 유대감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끝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예산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쓰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980년대 경제안정화: 물가안정과 긴축재정

글.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 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dsoak@naver.com)



1979년 박정희 정부의 종말은 정부주도 개발경제체제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제기했다. 국민소득은 세계 최빈국에서 중진국으로 도약했지만 외자도입과 수출주도 경제정책은 외채 망국의 엄청난 위기감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세계 4위의 외채, 누적되는 무역적자로 한국은 종속경제의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대학 운동권 중심의 소위 재야세력들은 해방 이후 우리 사회가 지향했던 자유경제체제에 깊은 의구심을 가졌고, 반면에 경제기획원 관료와 미국에서 유학한 소위 관변 경제학자들은 진정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¹.

총수요 확대에서 물가안정으로

1973년의 제1차 석유위기에 이어 1978년 이란의 이슬람혁명으로 촉발된 제2차 석유위기는 전 세계를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다. 석유가 폭등으로 인플레이션이 만성화하고 국제수지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선진 각국의 정부는 수입규제와 금융긴축에 적극 나서게 됐다. 이에 따라 신흥공업국의 대외무역 환경은 악화됐고 국제금리 인상으로 외채에 대한 이자부담도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어 단기간에 이윤을 창출할 수 없고 또 에너지 다소비산업인 중화학공업에 1970년대 중반부터 집중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었기에 석유위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한층 더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석유위기는 선진 각국의 경제학 사조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를 풍미했던 케인스 경제학이 퇴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확장재정을 통한 총수요 관리를 중시하던 케인스 경제학은 공급측면의 정책을 등한시 한다는 비판을 본격적으

¹ 당시 대학 운동권의 대표적 필독서로는 리영희, (1974), 「전환시대의 논리」, 강만길, (1978),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박현채, (1978), 「민족경제론」, 한완상, (1979), 「민중과 지식인」, 송건호외, (1979), 「해방전후사의 인식」 등이 있었다.

로 받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 등장한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은 확장재정이 정치, 관료, 이익집단에 의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제기했고, 1970년대에 발전한 거래비용의 제도경제학(Institutional Economics)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발전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논증하기 시작했다. 이들 이론은 총수요 관리보다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뒷받침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서 1979년 4월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기획원의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을 재가했는데, 이는 정부의 역할보다 시장경제의 역할을 강조하는 철학을 담고 있었다. 기존의 경제 개발 과정에서 성역이나 다름없었던 핵심적인 정책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었다. 수출지원의 축소, 중화학공업투자의 조정, 재정의 안정, 금융의 긴축, 경쟁의 촉진, 수입의 촉진, 가격의 현실화, 금융의 자율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는 투자확대를 위한 간섭과 규제 중심의 정부주도 성장전략을 간섭과 통제를 최소화하고 시장경제원리를 대폭 수용한 안정중심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주장이었다². 당시 경제기획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에 따른 정치·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했다. 우리 경제가 1980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이는 그동안의 양적 팽창전략으로 누적된 인플레이션 만성화, 시장구조 왜곡, 사회적·경제적 불균형 심화라는 구조적 문제로서 진단했다. 이제는 국가주도의 개발경제체제를 진정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인식이었다. 정책의 이러한 전환은 1980년에 등장한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에 의해 적극 수용됐다.

“[신현확 부총리가]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관철한 안정화시책이었지만 새 정부가 과연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였다. 경제정책에 깊은 지식이 없었던 신군부세력이 어떤 주장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전두환 정부의 경제성과는 물론, 한국경제의 모습이 전혀 달라졌을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정책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 경제수석이었던 김재익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철저한 시장개방주의자인 김재익 경제수석은 전두환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새로운 안정기조의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었다. 당시 청와대 역할과 영향력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했고 절대적이었다. 새로운 경제정책기조가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 그 당시 김재익 경제수석은 ‘경제 대통령’으로 회자될 정도로 막강한 역할을 수행했다³.”

² 경제기획원편. (1982), 「개발연대의 경제정책: 경제기획원 30년사(1961-1980)」, pp.193-194 참조. 당시 경제기획원 신현확 부총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하에 이 시책의 재가를 얻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재경회·예우회 엮음. (2011), 「한국의 재정 60년」, 한국조세연구원 기획, 매일경제신문사, p.111 참조.

³ []는 이해의 편의상 필자가 첨부했다. 재경회·예우회 엮음. (2011), 「한국의 재정 60년」, 한국조세연구원 기획, 매일경제신문사, p.130 참조. 이창규. (2008),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전두환시대 경제비사」, 개정증보판 참조.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의 핵심은 물가안정에 있었다. 외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수지의 개선이 필요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출경쟁력을 회복해야 하며,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가안정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1976~1978년 중 임금은 연평균 30% 이상 증가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79년 18.2%, 1980년 28.7%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들을 안정시키는 것이 경제회복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던 것이다. 안정화시책의 경제적 성과는 1983년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말 연 20~30%였던 심각한 물가고는 1983년 이후에 연 5% 이내로 안정됐다. 특히 1982년부터는 국제유가가 하락했고, 국제금리와 환율의 대외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이른바 '3저 현상'이라는 호재를 맞게 됐다. 이제는 자동차, 가전, 조선, 기계, 철강 등 중화학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 산업으로 등장하면서 국제수지 적자폭도 1984년 14억달러, 1985년 9억달러로 떨어지더니 1986년에는 46억달러라는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1986~1988년 3년 동안 연평균 12% 경제성장을 이룸으로써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는 찬사를 받게 됐다.

건축재정을 위한 시도들

성장에서 안정으로의 정책기조 전환은 가장 먼저 정부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축소로 나타났다. 1981년 10월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정부부처의 하부조직을 축소시키는 범정부적 개혁을 단행했다⁴. 1960~1970년대 경제개발과정에서 다양한 행정적 요구가 나타났고 또 근대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과정에서 정부조직은 경쟁적으로 팽창했다.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임기응변적으로 확대됐기에 정부조직의 기능 중복, 지나친 세분화, 상위직 과다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물론 정부조직의 감축은 신군부가 관료집단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동기에서 추진됐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정부조직 축소와 함께 1982년 1월 정부는 재정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점기준(零點基準)' 예산편성방식을 천명했다⁵. 영점기준(Zero Base Budgeting)이란 비록 전년도와 유사한 사업일지라도 그 사업의 시행효과, 경비수준을 영점에서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새롭게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년도 답습예산, 점증주의 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영점기준 예산제도는 국회를 막 통과한 1982년도 예산부터 적용됐는데, 이는 전

⁴ 당시 4급 이상의 상위직(과장급 이상) 정원을 총정원의 11.8%에 해당하는 599명을 감축시켰고 5급 이하의 하위직 정원도 1,492명 감축했다. 이는 당시 '10·15 행정개혁'으로 불리며 사상 유례없는 대폭적인 감축으로 평가된다. 최동규, (1991), 『성장시대의 정부』, p.55 참조.

⁵ '영점기준 예산편성'은 1970년대 미국에서 유행했던 방식으로 1979년에는 카터 대통령이 연방정부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e영상역사관 국가기록사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1980.6.5)

두환 정부가 경제적 논리를 최우선으로 삼으며 국회와 행정부를 강력하게 통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물론 당시의 예산삭감은 국외여비, 용역비 등 15개의 비목별 예산을 중심으로 진행됐기에 ‘비목별 일률삭감’이라는 고전적 삭감 방식의 틀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1982년에 이어 1983년에도 1984년 예산안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감행했다. 1970년대에 정부총지출이 매년 약 30% 이상씩 증가했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예산동결은 사실상 연례 증가율 수준으로 예산을 감축하는 것이었다. 특히 1985년 2월에는 총선이 있었는데 그 전년도인 1984년도 예산을 감축한다는 것은 전두환 정권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정치적 도박이었다. 물론 이 총선에서 김영삼, 김대중의 신민당이 사실상 압승함으로써 1987년 민주화를 위한 가열찬 투쟁이 전개될 수 있었다.

예산당국은 예산동결이라는 예산총량의 큰 원칙을 확립했기에 분야별 예산요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었다. 정치적으로 민감했던 농업 부문에서는 추곡수매가격을 동결했는데 그 인상률이 1980년 25%, 1981년 14%, 1982년 7.3%, 그리고 1983년에 0%가 됐던 것이다. 추곡수매가를 통한 쌀의 이중곡가제는 당시의 예산운용에 엄청난 부담을 주었고, 이는 전액 한국은행 차입으로 조성됐기에 통화증발의 사실상 주범이었다. 국방예산도 1979년 한·미 간의 합의에 따라 국민총생산(GNP) 대비 6% 수준을 유지해야 했지만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다. 철용성 같았던 농업 부문과 국방 부문의 예산삭감이 이루어지면서 공무원의 봉급 동결이 이어졌고, 이는 다시 민간기업의 임금인상 억제로 이어지며 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정책 추진은 예산실의 예산편성방식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예산편성을 담당

공무원 개인에게 의존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예산실 국·과장이 참여하는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으로서의 예산심의회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예산심의회의 토론을 통해 보다 넓은 시각에서 예산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감축에 따른 부처별 반발과 저항을 예산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문희갑 당시 예산실장은 1982년에 1983년 예산편성작업을 하면서, 새로운 예산심의방식인 예산심의회를 도입했다. 이전의 예산편성과정은 예산실 각 부처 담당사무관으로부터 담당국장에 이르기까지 각 결재경로를 거친 후, 예산배분의 최종 우선순위 설정은 예산총괄심의관과 예산실장이 결정했다. 새 방식인 예산심의회는 예산실의 관련 실무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담당부서를 초월해 예산우선순위를 함께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담당 분야에 대한 편협한 정보만 갖기 쉬운 담당자들이 공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므로, 비합리적인 예산배분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다. 예산심의회 방식의 또 다른 이점은 예산개혁 및 동결 예산 편성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또 심의내용에 대한 공동책임 및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삭감 등으로 인한 각 부처로부터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또 전체적인 시각에서 모든 예산사업을 심의함으로써, 투자우선순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함과 동시에 부처 간 예산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었다⁶.”

건전재정의 기반 구축

전두환 정부의 재정긴축 성과는 가히 획기적이었다. 만성적 재정적자를 감축하여 1988년과 1989년에는 재정수지가 완전히 흑자로 돌아섰다. 특히 재원조달 수단으로서 한은차입 대신 국채발행을 적극 추진하면서 본원통화 증발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해소했다. 이 둘은 모두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수단이지만 거시경제에 주는 효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한은차입을 통한 재원조달은 통화증발로 직접 연결되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만 국채발행은 정부가 자본시장에서 재원을 조성하기에 민간 부문의 경제활동을 구축(Crowding Out)한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한은차입 대신 국채발행을 활용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실질적인 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

〈표〉는 1980년대에 이룩한 재정성과를 보여주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20% 수준의 정부총지출 규모가 1988년에는 14.9%까지 하락했고 1981년 3.2%에 달하던 재정적자는 1987년 이후 흑자로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재정수지의 보전을 위한 한은차입과 해

⁶ 재경회·예우회 엮음(2011), 앞의 책, p.146.

외차입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특히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1982년의 21.1%에서 1989년 12.9%까지 8.2%p 하락했다. 국가채무는 재무부의 1969년 「결산개요」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개념인데, 당시에는 일반회계·특별회계의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의 합계로서 평가됐다. 1990년대 이후에는 기금에서도 국채를 발행하면서 국가채무의 대상범위는 확대됐지만, 2021년 현재까지도 국가채무는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다.

〈표〉 경제안정화 시대의 재정현황(1980~1989)¹⁾

(단위: %, 10억원)

연도	GDP 대비 정부총지출 ²⁾	GDP 대비 재정수지	총액	보전재원 ³⁾		GDP 대비 국가채무
				한은차입	해외	
1980	19.6	△2.2	1,288	264	318	19.0
1981	20.7	△3.2	2,537	453	533	19.3
1982	20.5	△2.9	2,235	△40	676	21.1
1983	18.3	△1.0	929	125	399	19.7
1984	17.6	△1.1	1,000	△1	309	17.2
1985	17.3	△1.1	801	△7	441	16.4
1986	15.9	△0.1	135	△10	△146	14.7
1987	15.4	0.4	△248	0	10	15.7
1988	14.9	1.4	△1,659	△655	△715	13.1
1989	16.2	0.2	19	530	△604	12.9

주 1) 재정범위는 ① 일반회계, ② 특별회계 중 기업성 특별회계(양곡관리, 전매사업, 철도사업, 통신사업, 조달)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③ 정부관리기금 중 금융성 기금(수출보험, 재산형성저축, 외환평형)을 제외한 기금 등으로 구성됨.

2) 정부총지출은 '세출 및 순융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순융자는 정부 부문의 금융제공에서 금융회수를 공제한 값임.

3) 보전재원은 재정수지 이외에 기업성 특별회계, 정부관리기금의 금융성기금 수지차를 모두 합한 금액임.

자료: 재무부, 「한국의 재정통계」(1994년 이전의 「한국통합재정수지」 명칭임), 각 연도

재무부, 「결산개요」, 각 연도

이처럼 1980년대 후반에 이룩한 건전재정은 우리 경제가 1990년대에 자율과 개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제논리를 앞세우며 막강한 철권통치를 행사했지만, 전두환 정부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완성 등 복지정책의 중요한 기틀도 마련했다. 1988년에는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올림픽 특수와 함께 국민적 자긍심도 양양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전두환 정부의 선택은 한국의 번영을 가져왔지만 이 공로가 민주화를 억압한 중대한 과실을 상쇄할 수 있을지 앞으로 더 많은 역사가 판단할 일이다.



H. van Rembrandt, <Self Portrait with Two Circles>,
c.1665~1669, Oil on Canvas, 114x94cm, Kenwood House, London

화가들은 왜 자화상을 많이 그릴까?

글. 최병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경제학자의 미술관』 저자

자화상이란 화가의 그림일 뿐만 아니라 화가 자신의 모습을 담은 작품이기에 그 가치가 곱절이 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작품이다. 특히 유명한 작가의 경우에는 더욱 소장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많은 화가들이 자화상을 그렸지만,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자화상을 꼽으라면 반 고흐나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꼽는 데 주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Vincent van Gogh, 'Self Portrait with Bandaged Ear',
1889, Oil on Canvas, 60x49cm, Courtauld Gallery, London

렘브란트(H. van Rembrandt, 1606~1669년)는 많은 자화상을 남겼다. 캔버스에 그린 것만도 무려 50~60점이나 되며, 종이와 판화 그리고 데생까지 모두 합치면 백여 점에 이른다. 렘브란트는 화가로서 명성을 얻고 생활이 윤택해진 다음에도 계속 자화상을 그렸다. 왜 그랬을까? 그의 외모는 자화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리 잘생긴 외모는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취로 그린 것은 아니었다.

당시의 화가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주문을 받아서 초상화를 그렸다. 초상화란 과거에는 자신의 명예와 권위를 세상에 남기기 위한 도구로써 이용됐다. 따라서 초상화는 당연히 권위 있고 근엄하게 그려져야만 했다. 당시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주문은 주로 돈이 많은 귀족들이나 상인계층의 신흥 부자들이었기 때문에 화가 자신이 느끼는 대로 그리고 싶은 그대로 그리는 데에는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렘브란트가 자화상을 계속해서 그린 이유는 그가 고객들의 주문에 따라 그리기를 원치 않았기에 그 결과 아무도 초상화를 주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초

상화를 통해서 어느 누구의 요구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상상력과 표현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다.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지극히 사실적이면서도 또한 지극히 인간적이다. 얼굴의 주름과 고뇌에 찬 듯한 눈빛 등에서 이미 그는 그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좋은 자화상이란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표현하지 않은 자화상은 화가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셈이다. 렘브란트가 이십 대에 그린 〈황금 고리줄을 두른 자화상(Self Portrait with Two Circles)〉을 보면 젊은 시절의 그는 패기와 자신감이 넘친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그린 1660년작인 〈이젤 앞에서의 자화상(Self Portrait at the Easel)〉에서 그는 노년의 초라한 노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풍요로운 노년의 모습이나 여유는 찾아볼 수 없다. 모든 것을 다 잃고 희망마저도 없는 듯한 노인의 모습이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묘사했다. 그래서 어떤 평론가는 ‘무자비할 정도로 너무나 무정한 기록’이라고 평했다. 이런 그의 냉정한 정직성 때문에 렘브란트가 인간의 영혼을 그린 위대한 화가로 평가받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년) 역시 초상화를 그려주고 돈을 벌고 싶었지만, 그의 그림이 워낙 개성이 강하고 거칠어서 고객의 주문이 없었다. 돈이 없었으므로 모델을 불러서 초상화를 그릴 수 없었다. 자화상은 거울만 있으면 그릴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모델로 초상화 연습을 했다. 그로 인해 그는 모두 35점이나 되는 자화상을 그렸다. 그중에서 〈귀를 자른 자화상(Self-Portrait with Bandaged Ear)〉은 자화상 가운데에서도 그의 기이한 운명의 이력을 한 번에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프랑스 아를에서 같이 살았던 폴 고갱과 심한 다툼 끝에 헤어지고 나서 그의 걱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스스로 귀를 자른 사건 이후, 어느 정도는 마음을 추스른 뒤에 그린 자화상인 것 같다.

거의 모든 화가들이 이처럼 자화상을 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고객 만족을 위해서 그리는 초상화와는 달리 자화상은 모델의 주문이나 요구를 떨쳐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화가들에게 표현에 있어서 상당한 자유를 준다. 이 점이 화가들이 자화상을 즐겨 그린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즉, 화가들이 초상화를 주문받을 때 느끼는 여러 제약조건에서 해방시켜준다. 둘째로, 인간의 다양한 표정의 변화에 대한 그림 연습을 위한 모델로 자신보다 더 구하기 쉬운 모델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화가가 자화상에 몰입하도록 만드는 유인이 됐을 것이다. 자화상 습작은 그의 예술적 화법을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서 비용이 들지 않는 일거양득의 방법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화가들이 자화상을 많이 그릴 수밖에 없었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화가 자신이 모델이 되면 모델을 고용하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즉, 모델료가 영(零)이다. 당시에 대개는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지냈던 화가들에게는 모델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은 크게 매력적인 것이었다.



Pierre-Auguste Renoir, <Le Moulin de la Galette>, 1876, Oil on Canvas, 131x175cm, Musée d'Orsay, Paris

“이 모델은 항상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고 말을 잘 듣지요. 게다가 화가는 그림을 그리기 전부터 이미 이 모델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19세기 파리화단에서 활동한 앙리 팡탱 라투르(Henri Fantin Latour, 1836~1904년)가 한 말이다. 과연 이렇게 이상적인 모델이 존재할 수 있을까? 바로 그 모델은 ‘그 자신’을 두고 한 말이다. 자화상을 그리는 화가는 모델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팡탱 라투르의 말처럼 ‘원하는 포즈를 잘 잡아줄까?’라든지 ‘비용을 많이 요구하지나 않을까?’ 같은 걱정거리가 단번에 사라지게 된다.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1841~1919년)는 모델료를 줄이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한 적이 있다. 그의 그림 가운데 당시 무도회의 흥겨움이 그대로 묻어나는 듯한 <갈레트의 무도회(Le Moulin de la Galette)>라는 작품이 있다. 당시의 몽마르트르는 밀밭이 남아있는 한적한 교외였는데, 이곳의 야외 댄스장에서는 휴일이면 무도회가 열렸다. 이 갈레트 무도회장을 그리는 데 많은 등장인물이 필요했다. 정작 어려운 문제는 춤추는 젊은 아가씨들을 모델로 구하는 일이었다. 전문 모델을 쓰려면 많은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만, 르누아르는 여성의 심리를 아는 화가였다. 그는 패션에 민감한 젊은 여성들의 심리를 이용했다. 그는 모델이 되어주면 당시에 한창 유행 중이었던 원뿔 모자를 공짜로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모델을 하겠다는 여성들이 줄을 섰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해서 젊은 여자 모델들에게 지불해야 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르누아르는 요즘 기업의 생존전략인 비용극소화(Cost Minimization) 원리를 경험적으로 터득하고 있었던 셈이다.

종교경제학을 창시한

막스 베버

글.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현재 자유주의연구회 회장

Max Weber
막스 베버 1864~1920

Economics of Religion



원칙을 지키는 경제학자, 막스 베버

20세기 전환기에 독일, 영국, 미국 등 서구 사회의 삶의 방식을 압도적으로 지배한 것은 자본주의였다. 전에 없이 눈부신 경제적 번영으로 대중의 생활 수준이 급격히 향상됐다. 새로운 연구 방법을 모색하여, 전환기 변화의 의미를 깨내는 일에 평생을 바친 인물이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년)다.

베버는 종교, 도덕, 법 등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개인의 행동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계급이나 집단을 중심으로 한 집단주의 방법을 믿지 말라고 경고했다. 집단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실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경제학이 객관적인 과학이 되기 위해서 학자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 원칙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경험적 연구를 통한 이론의 검증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기독교는 자본주의의 수호자!

법학, 철학, 경제학으로 학문에 입문했던 베버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환기의 변화와 발전을 불러온 요인을 찾으려 했다. 그런 발전은 엄격한 도덕적 기강과 헌신적인 노동, 장기투자와 이를 가능하게 한 저축, 기업가적 혁신과 경영기법의 개발에 기인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위의 요인들이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힘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위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어려서부터 종교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졌던 베버는 자본주의 초창기에 부유 계층으로 떠오른 자본가와 경영자, 장인의 대다수



가 개신교였다는 역사적 사실에 주목했다. 17세기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성실한 노동과 이를 통한 부의 획득은 신의 축복이라고 여겼다고 한다. 노동은 금욕을 위한 수단이자 나태를 예방하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인식도 생겨났다는 게 베버의 설명이다. 근검절약과 저축을 통한 자본축적이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순간이다. 흥미롭게도 노동과 절약은 구원의 조건이자 신앙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증표로도 평가됐다. 따라서 자본주의 발생은 개신교의 산물이라는 게 베버의 결론이다.

베버는 자본주의 정신은 탐욕과 이윤추구라는 주장에 강력하게 도전했다. 탐욕에 관한 해당 논리는 유치원에서나 가르칠 순박한 생각이라고 비판하면서 탐욕적 충동은 어떤 사회에서도 존재했고 그래서 유독 자본주의에서만 목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교 윤리를 토대로 하는 자본주의야말로 탐욕을 억제한다는 논리를 폈다.

베블렌과 세기적 논쟁을 벌였던 베버

베버의 사상은 서구사회에 흥미하던 반(反) 종교적 분위기를 무력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신앙을 도덕적 불구인의 지팡이쯤으로 여겼던 니체와 종교를 환각이자 불합리한 정신적 혼란이라고 비아냥대던 프로이트에 겨냥하여 그는 자본주의를 지탱한 기독교야말로 변명을 불러온 서구 문명의 핵심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자본주의를 등장시킨 게 종교라는 인식을 통해서 경제적 토대가 종교를 규정한다고 주장하는 좌익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베버는 유한계급의 과시 소비로 자본주의를 풍자하던 미국의 인류학자 겸 경제학자였던 베블렌과의 세기적인 대결을 벌였다. 아메리카 대륙의 중심부에서 베블렌이 자본주의를 야만적 진화와 착취의 대표적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일 때

유럽 대륙의 한복판에서는 베버가 자본주의의 정신이야말로 인간의 악랄적 행동을 중단시킨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논리를 펴다. 베블렌이 자본가를 악탈자이자 출세주의자라고 응수하자 베버는 게으름과 낭비를 막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촉진하는 개인의 기독교적 양심과 훈계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침을 가한다. 베블렌과의 논쟁에서 승리했던 베버는 사회주의 운동에도 강력하게 맞섰다.

노동자의 삶은 물론이고 독일 경제의 발전을 지체시키는 게 사회주의라고 역설했다. 이는 관료의 비대화로 개인의 자유를 옹호한다는 이유에서 그 이념은 달성해서도 안 될 유토피아라고 주장했다.

베버 사상의 영향으로 동양의 학자들은 유교 윤리를 의미하는 ‘동아시아의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개념을 개발했다.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버는 자본주의 정신은 탐욕과 이윤추구라는 주장에 강력하게 도전했다. 탐욕에 관한 그런 논리는 유치원에서나 가르칠 순박한 생각이라고 비판하면서 탐욕적 충동은 어떤 사회에서도 존재했고 그래서 유독 자본주의에서만 목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교윤리를 토대로 하는 자본주의야말로 탐욕을 억제한다는 논리를 폈다.





등의 번영은 그런 정신의 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직시할 것은 경제발전은 종교 자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종교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크게 공헌했는가에 좌우된다는 점이다.

베버가 보았던 자본주의의 한계

베버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데에도 인색하지 않았다. 자본주의는 거대한 부를 창출하지만, 기업의 관료화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정부 관료제와 똑같이 개인을 움아매는 ‘강철 우리(Iron Cage)’와 같다는, 그래서 자본주의의 활력을 파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그는 기업이 정부의 관료 시스템과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간과했다. 유연성이 없을 정도로 개인을 억압하는 기업조직은 경쟁을 통해서 도태된

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 관료제에는 그런 경쟁이 없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 사이에 정(情)이 없고 공동체 가치도 없다는 게 베버의 진단이었다. 전통사회에서는 서로 알고 지내는 이웃과 협력하지만, 오늘날에는 모르는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대인은 외롭지 않다. 자본주의는 가족, 친구, 직장동료, 친목단체 등, 우정과 애착을 나눌 소규모 집단을 창출한다. 외로움은 개인의 성격 탓일 뿐이지 자본주의 제도의 탓은 아니다.

베버의 사상은 비판의 여지가 많다. 하지만 그는 20세기의 전환기를 이끈 위대한 사상가라는 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적다. 그는 자본주의를 종교적 시각에서 해석하여 종교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영역을 개척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Financial *Calendar*

2021 09月 September

● 재정

- 2022년 예산안 제출(정부→국회)
-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 경제

- 한국은행 2021년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 ADB 2021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 수정(Asian Development Outlook Update) 발표

January

재정

- 2022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경제

- 통계청 2020년 연간 고용동향 발표
- 한국은행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국내총생산 발표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 IMF 수정세계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February

재정

- 2020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 2020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경제

- 통계청 2020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결과 발표

March

재정

- 2022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
-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경제

- 한국은행 2020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발표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July

재정

-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경제

- 통계청 2021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발표

국제

- IMF 수정세계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August

재정

- 2022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경제

- 통계청 2021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September

재정

- 2022년 예산안 제출(정부→국회)
-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경제

- 한국은행 2021년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 ADB 2021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 수정 (Asian Development Outlook Update) 발표

□ 「202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 등 제2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 8.12.)

- 기획재정부는 민관합동위원회인 제2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 2022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은 '국유재산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및 포용성장 지원'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4개의 정책방향*과 15개의 정책과제 제시

* ① 민간·지자체 협력으로 개발 효과성 제고, ② 국가정책 지원 및 수요자 중심 제도 운영, ③ 관리 내실화를 통한 국유재산 가치 제고, ④ 국유재산 관리기반 강화

□ 2021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통계청, 8.19.)

- 2021년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28만 7천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0.7% 감소 (지출) 가구당 월평균 지출은 330만 8천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4.0% 증가, 소비지출(3.8%)과 비소비지출(4.6%) 모두 증가 (가계수지) 처분가능소득은 345만 4천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9% 감소

April

04

May

05

June

06

재정

- 2020년 결산검사 의뢰(기획재정부→감사원)

경제

- 통계청 2020년 가계동향조사(연간 지출) 결과 발표
- 한국은행 2021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발표

국제

-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 ADB 2021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Asian Development Outlook) 발표

재정

- 2022년 예산요구서 제출(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 2020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국회)
- 2020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 2020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 2021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경제

- 통계청 2020년 가계동향조사(지출 부문) 결과 발표
- 통계청 2021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국제

- OECD 경제전망보고서(Economic Outlook) 발표

경제

- 한국은행 2021년 1/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기획재정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October

10

November

11

December

12

국제

-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재정

- 2022년 예산안 국회 심의·의결

경제

- 통계청 2021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국제

- OECD 경제전망보고서(Economic Outlook) 발표

재정

- 2022년 예산 확정

경제

- 기획재정부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한국은행 2021년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①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원장, 탈(脫) 플라스틱 실천을 위한 ‘고고 챌린지’ 동참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원장은 8월 17일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고고 챌린지(Go! Go! Challenge)’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고고 챌린지’는 지난 1월 환경부가 SNS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와 친환경 제품 사용 실천을 약속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김재훈 원장은 ‘일회용품은 거절하Go! 다회용품을 사용하Go!’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2050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우리 모두 탈(脫) 플라스틱 캠페인에 참여해야 하며, 환경 보전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직원이 건물 내 카페에서 텀블러나 머그컵 이용 시 혜택을 제공하는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실시로 “탈(脫) 플라스틱을 통해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기업문화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②

한국재정정보원, 인도네시아 재무부와 ‘재정정보시스템의 미래’ 주제로 공동 세미나 개최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8월 25일 인도네시아 재무부와 공동으로 「디지털 정부 전환 - 재정정보시스템의 미래」를 주제로 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양국의 재정시스템 현황 공유 및 인도네시아 차세대 재정시스템 방향 모색’을 위한 내용으로 양국에서 160명 이상의 재정 담당자와 IT 전문가가 참여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차세대 dBrain의 혁신적 변화와 시스템 간 연계의 중요성을 발표했고,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재정정보관리시스템(FMIS)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차세대 시스템 구축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실시간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 한국의 선진화된 연계기술 방식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dBrain을 소개해 참가자들의 관심과 질문이 집중됐다.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계획하고 있는 차세대 재정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형식의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우수사례발표 [공공부문]

☺ 우수사례 선정을 축하합니다! ☺

수상내역	유형	기관명	사례명
최우수상	공공기관	예금보험공사	“세계 최초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다”
우수상	중앙부처	음성소방서	지적장애인 안전한 자립생활 지원사업 예산마련 극복
	지방공기업	인천서구 시설관리공단	위기를 기회로! 우리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지(SG)!
장려상	광역자치단체	광주광역시	지역사회 합의를 통한 17년만에 도시철도2호선 건립 추진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 김제시	내일(JOB)이 있는 위풍당당 시니어(Senior), 환경 잡고 노인자살 막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숙의민주주의로 ‘보존과 개발’의 갈등 해결 ‘장록습지, 국내 1호 도심 속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공공기관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One-Click 산재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다
		축산물품질평가원	‘학교급식 축산물 가격산정 표준모델’ 개발로 급식용 축산물의 납품 투명성 강화
		한국소비자원	범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해외 위해제품 감시 강화
		한국조폐공사	‘시행착오는 결과가 아니다. 성공으로 가는 이정표일 뿐이다.’ -사례: 가짜화폐류 판별 대국민 무상서비스 실시
사회공헌상	중앙부처	충남소방본부	충남소방, 진입곤란 장소의 소방전출 한계를 극복하다!
	의회	충남서산시의회	서산시 도심상권 활성화 및 자원에 관한 조례 (전국최초조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안양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허용을 통한 포화 위기의 의료폐기물 적체 완화
		경상남도 김해시	생애주기별 신체변화를 반영한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사업
	공공기관	한국광해관리공단	코로나19 재기안전망, 적극·맞춤형 종합지원정책 「중소기업 S.O.S프로그램」 가동
		한국국제협력단	역전의 드라마, 세계가 놀란 2단계 수직 향상! - Poor에서 Good 등급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공공기관 최초’ 건설현장 안전관리 챗봇을 구축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포터로 거듭나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자체 협력 승강기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매칭
		한국재정정보원	K-방역의 숨은 주역은 디브레인 운영
		한국환경공단	적극행정이 만든 나비효과! 환경부하가 적은 신(新) 환경산업체 육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이다 PET병이 투명해 졌습니다.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 ‘35년만’ 입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주)	국내 최초 비대면 온라인 공연대관 운영으로 수익 증대
	지방공기업	양주시시설관리공단	혁신에 조달을 더하다
		은평구시설관리공단	경력단절여성·소상공인 경제활동 판로마련을 위한 비대면 플리마켓 추진

월간 <나라재정> 정기구독 신청안내

정기구독 신청방법



월간 <나라재정>은 구독 신청 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라재정 E-mail을 통해 받아보실
성명, 주소, 연락처 및 서명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E-mail: narajaejung@kpfis.or.kr





애독자 코너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라재정> 사진인증 이벤트

월간 <나라재정>을 즐겁게 읽으셨다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사진과 함께 간단한 느낀 점을 적어 보내주신
분들을 선정하여 커피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호 이벤트 당첨자

159*****@gmail.com
wys*****@nate.com
min*****@naver.com
cha***@naver.com
gnp***@gmail.com
vv-*****@hanmail.net

사진인증 및 독자편지 보내주실 곳

이메일 narajaejung@kpfis.or.kr

응모 기간 2021. 9. 28. ~ 10. 15.



독자편지

코로나19 이후의 재정상황에 대한 대비 칼럼 글에 관심을 갖고 보았습니다.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경기의 빠른 회복과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는 불평등의 완화와 경기 부양 정책이 동시에 대규모로 추진되어야 하기에 효율적 재정 투입 및 분배 그리고 안정적 재정운용이 백신 접종 못지않게 중요한 일임을 잘 역설해 주셨다 생각합니다.

159*****

월간 <나라재정>은 개인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narajaejung@kpfis.or.kr로 메일 주세요.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 재정의 밝은 내일을 위해
재정정보화를 이끌어갑니다.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273-0500 Fax 02-6312-8959 www.kpfis.or.kr



9 772508 897000
ISSN 2508-8971